

전략연구 2020-16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연구

김기흥 책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 과소화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외적인 요소로 치부되어 관련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지역 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농촌정착을 위해 보육·문화 인프라 복합 주거공간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선정되는 수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확보가 쉽지는 않다. 정주 기반에는 문화나 교육, 복지, 보건, 의료 시설 등이 포함되며, 여러 측면에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주 기반 지원은 지역에서 농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을 포함하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주 기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의 정주 관련 연구에서 파생하였거나,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청년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거나, 혹은 정주 기반 가운데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정주와 관련해서는 특히 개념을 중심으로 정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농어촌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정주환경이라는 큰 범주에서부터 정주공간, 정주체계의 변화 등 농어촌을 둘러싼 인구의 감소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방창생정책 차원에서 젊은 층의 유입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농림수산성을 넘어서 범 부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의 문제로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및 과소 지역을 대상으로 젊은 층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일본 총무성과 국토교통성 지원의 ‘지방창생 인재 파견제도’, ‘집락지원인(集落支援員)’, ‘지역부흥협력대’, ‘두 지역 거주’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정책

2019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충남 청년 농업인 수는 6,965명으로 25세 미만이 382명, 25~29세 900명, 30~34세 1,823명, 35~39세 3,860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로는 논산시(738명), 부여군(676명), 천안시(6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9,846명이던 것이 2016년 9,144명, 2017년 7,595명, 2018년 7,284명을 거쳐 2019년에는 7천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 5년간 2,881명이 줄어들어 약 29.2%가 감소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만 2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두 해째 증가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주거를 제공하자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는 2019년도에 제안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유일하다. 이와는 별도로 청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 주거 부분에서는 귀농인의 집이 있으나 지역의 여건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귀농인의 집의 경우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충남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56채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사업 가운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편, 문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과의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농촌 현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충남의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제4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실태 조사

여기에서는 실제 지역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확보 등 정주 기반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는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섯 군데 조직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가운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지원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었고,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지역조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청년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지역에 새롭게 내려와 농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역 탐색을 위한 임시 거처와 빈집을 활용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언급되었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농업 관련 정보의 발신처로서뿐 아니라 문화나 복지 측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유희시설의 활용 등도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공간의 활용 및 운영을 청년 농업인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이 강조되었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 결과로는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비단 기반 없이 지역에 내려온 비승계농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함께 지역에 있는

승계농의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지역 내에서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거주지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다. 문화나 교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유공간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면 단위의 설치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는 산부인과나 영유아들을 위한 소아과 등에 대한 요구와 긴급 상황에 대한 우려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단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의 의료 문제와도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은 비단 청년 농업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새롭게 지역에 내려오려는 귀농귀촌인은 물론 이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정주 기반과 관련한 개선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위의 논의 구조 속에서 실제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정주 기반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을 마련하고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 개선과 더불어 지역에 청년층이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에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 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다. 마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농촌마을의 위기 속에서 또한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청년 농업인 확보는 지역 농업의 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력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정착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이고도 통합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마련이라는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으로는 국비 사업 등 다양한 각종 사업 및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의 청년 농업인의 역할 제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사업으로 특히 지역의 기존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정주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 과소화 문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면서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유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지역을 선택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정주 기반은 지역 정착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제언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사업들을 모아 전반적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며, 타 실국과의 연계성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주 기반 지원 사업을 함께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각각 필요하며, 우선은 도·시군 공용지 활용에 대해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에 국비사업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먼 단위 청년 농업인 공유공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조직 및 지역자원 조사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 논의를 통해 지역에 어떠한 마을 구성원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지역의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구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지는 물론 농업 관련 시설과 문화, 교육, 보육, 복지 등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며 마을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함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장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3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3
1) 청년 농업인 연구	3
2) 정주 관련 연구	5
3) 정주 개념 연구	6
4) 농어촌 정주 기반 연구	7
2. 일본 사례	8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정책	11
1.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1
1) 충남 시군별 농가 인구 현황	11
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4
2. 청년 농업인 정주 관련 정책	18
1) 농어촌정책에 따른 정주 관련 정책	18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관련 사업	19
3) 충남의 청년 관련 사업	21
제4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실태 조사	27
1.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조직	27
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27
2) 심층 면담 조사 결과	28
3) 소결	61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65
1) 수요 조사 개요	65
2) 수요 조사 결과	66
3) 소결	76
제5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	79
1.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 지원 방향	79
1) 청년 농업인만의 문제인가?	79
2)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은 필요하다!	79
3)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80
4) 단계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81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	82
1)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의 비전 및 전략	82
2) 세부 사업 방안	8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9
1. 결론	89
2. 정책 제언	91
〈참고문헌〉	97
〈부록 1〉 착수 연심회 의견 반영 여부	101
〈부록 2〉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사업	102
〈부록 3〉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107
〈부록 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109

표 목차

[표 1] 충남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9개년)	11
[표 2] 충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12
[표 3] 충남 청년인구 현황(2019)	14
[표 4]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2015~2019)	15
[표 5]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17
[표 6] 국내 주요 농어촌정책 변화에 따른 정주 관련 정책의 흐름	18
[표 7]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20
[표 8] 정주 기반 관련 귀농귀촌 지원 사업	20
[표 9] 충남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2013~2019)	21
[표 10] 충남 취업지원형 청년 사업	22
[표 11] 충남 창업지원형 청년 사업	23
[표 12] 충남 주거·금융형 청년 사업	23
[표 13] 충남 생활·복지형 청년 사업	24
[표 14] 충남 정책참여형 청년 사업	24
[표 15] 충남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2019년)	24
[표 16] 친환경청년농부사업	26
[표 17] 충남 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26
[표 18] 청년 농업인 정주 관련 조사 대상	27
[표 19]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30
[표 20] 충남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사업 제안(안)	87

그림 목차

[그림 1] 지역부흥협력대를 마치고 지역에 정착한 미야하라씨	10
[그림 2]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좌), 내부 다양한 센터(우) 전경	29
[그림 3] 의성군 스마트팜(좌), 임시거처와 팜문화빌리지(중), 게스트하우스(우) 전경 ...	31
[그림 4] 완주군 공동체미디어센터(좌), 거점공간 림보책방(우) 전경	36
[그림 5]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37
[그림 6] 완주 JUMP프로젝트	39
[그림 7] 완주 JUMP-UP프로젝트	40
[그림 8]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전경	43
[그림 9] 제천시 누리마을 빵카페(좌), 사회적 농업 블루베리 농원(우)	48
[그림 10] 상주시 청년이그린협동조합 폐교 활용 전경	55
[그림 11] 서천군 삶기술학교 ‘한산한오늘’ 카페 전경	59
[그림 12]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 흥성(좌), 부여(우) 전경	65
[그림 13]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 맵	9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청년 농업인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 과소화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후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연간 1,600명 규모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생활비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착 자금의 지원 및 실습을 위한 교육 기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및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의 주거 시설을 포함하는 정주 기반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외적인 요소로 치부되어 관련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지역 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이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했지만 이용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마상진 외(2017)는 정착장려금 지원(49.6%), 농지 알선(26.7%), 농산물 판로 지원(26.5%), 농기계 설비 알선(19.3%), ‘주거지 알선’(17.4%) 순임을 밝혀 농업과 관련한 사업 이외에는 주거지 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정책 가운데 임시거처를 위한 귀농인의 집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르며, 탐색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실제로 마을에서 정착하는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농촌정착을 위해 보육·문화 인프라 복합 주거공간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발표하고 4월에는 전국 4개소(개소당 2년간 80억 원)를 선정하였고 충남에서는 서천군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선정되는 수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여전히 실제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확보가 쉽지는 않다. 더불어 정주 기반에는 주거 문제 이외에도 문화나 교육, 복지, 보건, 의료 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실상 청년 농업인을 넘어서 청년층과 지역에 새롭게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나아가 이미 마을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삶의 질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주 기반 지원은 지역에서 농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 지원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조직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상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방향이 농업 기반 조성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주 기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1) 청년 농업인 연구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오해섭, 김정주(2002)는 미래 세대 육성 차원에서 농업 및 농촌의 인력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80년대 이후 인력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집단 간 상이한 요구와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체계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임형백(2008)은 농업인력육성이 현직교육훈련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식 기반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은영(2014)은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2004~2013) 예산의 많은 부분(65%)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잠재적 농업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을 접할수록 농업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강호, 마상진(2009)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농업생산성 기여도 평가 연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6년 후부터 농업생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됨을 밝혔다.

전익수, 김병률(2011)은 농업인력 고용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농업 분야 노동경험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농업인턴제의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진종순(2010)은 농업인대학 운영 연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서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에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자신감 증대와 협력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을 포함하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2017)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한 진입유형별,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창업농 육성 체계에 관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형태의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했지만 이용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정착장려금 지원(49.6%), 농지 알선(26.7%), 농산물 판로 지원(26.5%), 농기계 설비 알선(19.3%), 주거지 알선(17.4%) 순임을 밝혔다.

이향미(2018)는 청년창업농(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자)을 대상으로 한 농지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은행'의 이용 실태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활용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옥,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김종숙(2017)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영농의 규모화, 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인증 및 수상 등의 결과가 창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연구로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충남 청년 농업인의 지역별 현황 및 실태 조사(2016)를 시작으로 실천농장(2018), 농지문제(2019) 등이 진행되었다.

김기홍(2016, 2017)은 청년 농업인을 후계농, 귀농인, 귀촌인(잠재적 귀농인)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 청년 농업인이 처해있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기홍(2018)은 전국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실천농장의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실천농장의 특성과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천농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천농장은 지역 농업을 전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업을 하는

청년인을 육성하는 한편, 농촌 사회의 이해와 지역 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농촌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농촌 청년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기홍(2019)은 농사의 기본이 되는 농지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농지 접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설문 조사(67명)를 통해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이 처한 영농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일 농지법 비교를 통해 ‘소유’에 초점을 둔 국내 상황과 ‘이용’에 초점을 둔 일본의 여건이 다르며, ‘농업 위원회’와 같은 지역 단위 농지 관련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김기홍(2019)은 연구에서 정주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 실태 조사 설문 결과 가운데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승계창농과 비승계창농의 양쪽 그룹 모두에서 ‘부모, 형제, 친지, 지인’(각각 44.1%, 36.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 승계농은 ‘농협’(11.8%)의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비승계창농은 ‘부동산업자’(27.3%), ‘은행 등 금융기관’(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자금 문제 이외에도 지역 내에서 주택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족하여 부동산업자를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거확보 방법으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고향집이 32.4%, 농가 이외의 빈집을 빌린 경우가 1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계창농의 경우 66.7%가 고향집, 다음으로 9.1%가 농가 이외의 빈집을 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주 관련 연구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주 기반 관련 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존의 정주 관련 연구에서 파생하였거나,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청년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거나, 혹은 정주 기반 가운데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엄창옥, 노광욱, 박상우(2017)는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에 관한 결정요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요인으로는 ‘직업’(일자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가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는 ‘사회활동’과 ‘참여활동’과 같은 사회적 관계자본은 물론 ‘창업의지’, ‘청년정책에 참여할 의사’와 같은 주체적 요건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가온, 김희수, 정석(2019)은 청년공간 즉 ‘청년들이 관계망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한 장소’에 초점을 두고 완주군 청년들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년공간은 외부 유입 청년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정착 후 적응하는 단계에서 정주지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주지속 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청년공간에서 진행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3) 정주 개념 연구

특히 정주와 관련해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종재, 신남수(1991)는 도시민의 거주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정주를 ‘인간의 삶이 지역성과 결부되어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지역과의 사이에 심적 결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심적 결합의 의식을 정주의식’으로 정의하였다(若林, 1984). 정주의식에 가장 영향을 준 변수는 이웃주민들에 대한 의식이었고 환경적인 시설 부분은 ‘도시민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삶의 척도’인 정주의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인 커뮤니티 의식과 이웃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성희, 주경필(2018)은 정주를 ‘정주의식을 가지고 거주하는 개념’으로 정주의식과 정주의사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정주의식’은 장소감을 포함한 개념으로 주거 형태나 학교, 병원 시설 등 물리적 기반과 이웃 간 교류, 지역사회 결속력 등 사회자본이 영향을 끼치며, ‘정주의사’는 향후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표명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희창, 박희봉, 정우일(2001)은 정주의식을 ‘개인이 그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통, 교육, 지역경제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 그리고 공공서비스 즉 지방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안 되며, 특히 사회적 자본과 병행하여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황성호, 이희선(2019)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별 요인보다는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과 지속적 유지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정주의식 형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일상문제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정책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역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참여 촉발과 네트워크 형성’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4) 농어촌 정주 기반 연구

농어촌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정주환경이라는 큰 범주에서부터 정주공간, 정주체계의 변화 등 농어촌을 둘러싼 인구의 감소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성주인 외(2012, 2013)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를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농어촌 커뮤니티(공동체)가 다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차년도 농어촌 정주 기반 실태 조사에 이어 2차년도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보완하여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심도 있게 제안하였다.

김정연(1999), 조봉운·김정연(2004)은 대전 충남권 사례를 바탕으로 정주체계상의 기능 변화에 주목하였다. 정주체계상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마을, 읍·면과 같은 기초적 정주 단위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상위 대도시나 거점도시의 기능 및 위상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연(2010)은 농어촌 정주환경 변화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정주환경을 ‘인간이 일정 장소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총체적 지원환경’으로 정의하고 농어촌 정주

환경 관련 정책을 평가한 가운데,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서의 농어촌 정주환경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바탕으로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최근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 ‘정주 기반’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방창생정책 차원에서 젊은 층의 유입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으로는 농림수산성을 넘어서 범 부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의 문제로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일본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에서 진행 중인 ‘지방창생 인재 파견제도’, ‘집락지원인(集落支援員)’, ‘지역부흥협력대’, ‘두 지역 거주’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업들은 농산어촌 지역, 과소 지역을 대상으로 젊은 층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방창생 인재 파견제도’는 총무성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창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정·촌(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 이하)을 대상으로 의욕과 능력있는 국가 공무원·대학 연구자·민간 인재를 시·정·촌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방안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첫해에는 67개 시·정·촌에 국가 공무원 42명, 대학 연구자 14명, 민간 인재 11명을 파견하였다. 2016년도에는 55개소에 국가 공무원 41명, 대학 연구자 2명, 민간 인재 12명을 파견하였다. 2017년도에는 54개소에 국가 공무원 43명, 대학 연구자 2명, 민간 인재 9명을 파견하였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재 중 농업 분야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게 되었고 농업 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최우선시 하여 신규취농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출산·육아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집락지원인’은 총무성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밝고 집락 대책의 추진에 관한 노하우와 지식을 가진 인재를 지자체에서 위촉받아 사·정·촌 직원과 연계하여 마을 순회, 상황 파악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의 전임 집락지원인 수는 1,158명이며, 자치 회장 등을 겸임하는 집락지원인 수는 3,276명에 달한다. 지자체는 집락지원인을 설치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집락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조치(지원인 일인당 350만 엔, 다른 업무와 겸임의 경우 인당 40만 엔을 한도로 특별교부세 조치),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집락지원인은 사·정·촌 직원과 협력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주민과 주민, 주민과 사·정·촌사이에서 마을의 현황, 과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총무성은 집락지원인의 활약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교류추진’,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부흥’, ‘농산어촌 교육 교류’에 대한 지원 등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락지원인의 사례금·여비·연수 수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농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집락지원인이 실시하는 마을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과소 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생활 거점을 옮긴 자를 지방공공단체가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브랜드 및 특산품의 개발·판매·PR 등의 지역 부흥을 지원하게 된다. 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등 지역 협력 활동을 실시하면서 그 지역으로의 정주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2016년도 지역부흥협력대원 수는 3,978명에 달한다.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역부흥협력대원 활동비(대원 일인당 400만 엔 상한)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임기를 마친 2,230명의 절반 가량은 활동했던 지역에 남아 숙박업이나 농업법인에 취농 혹은 민가카페 등으로 창업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8).



[그림 1] 지역부흥협력대를 마치고 지역에 정착한 미야하라씨

출처: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8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성에서는 ‘시험 거주(お試し居住)’를 포함한 ‘두 지역 거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가진 지속 가능한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만들기의 주체가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시에 사는 주민이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도 동시에 생활 기반을 갖는 ‘두 지역 거주’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정책

1.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 충남 시군별 농가 인구 현황

2019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19,903호로 전국 농가 1,007,158호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농가인구는 263,124명으로 전국 농가인구 2,244,783명의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1.7%로 감소하고 있고, 충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6%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3.4%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남에서는 4.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시군별 연령별 농가 분포는 표 2와 같다. 2015년 충남의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상의 경우 92.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6.3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65.6세보다 0.7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 전체의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충남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9개년)

단위: 가구, 명, %

행정 구역별	2010		2019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전국	1,177,318	3,062,956	1,007,158	2,244,783	-1.7%	-3.4%
충청남도	151,424	394,324	119,903	263,124	-2.6%	-4.4%
천안시	12,406	36,774	11,300	27,424	-1.0%	-3.2%
공주시	12,089	31,577	9,441	21,460	-2.7%	-4.2%
보령시	9,006	22,632	7,502	16,024	-2.0%	-3.8%

행정 구역별	2010		2019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아산시	10,499	30,019	8,684	20,231	-2.1%	-4.3%
서산시	13,320	33,778	9,510	20,173	-3.7%	-5.6%
논산시	11,925	31,185	10,414	21,639	-1.5%	-4.0%
계룡시	549	1,647	512	1,174	-0.8%	-3.7%
당진시	-	-	11,160	25,823	-	-
금산군	7,638	19,188	6,309	13,605	-2.1%	-3.7%
연기군	5,520	15,228	-	-	-	-
부여군	10,905	27,798	8,335	17,727	-2.9%	-4.9%
서천군	7,136	17,255	6,559	13,815	-0.9%	-2.4%
청양군	6,427	15,694	5,612	12,014	-1.5%	-2.9%
홍성군	11,082	28,274	8,097	16,281	-3.4%	-5.9%
예산군	11,118	28,280	9,380	21,210	-1.9%	-3.1%
태안군	8,315	19,266	7,089	14,525	-1.8%	-3.1%
당진군	13,489	35,729	-	-	-	-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표 2] 충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가구, 세

행정 구역	20 ~29	30 ~39	40 ~49	50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세 이상	합계	경영주 평균 연령
전국	792	13,574	84,025	246,824	161,298	170,860	165,210	152,166	93,769	1,088,518	65.6
충남	89	1,452	8,813	28,450	19,204	21,158	20,128	19,301	13,413	132,008	66.3
천안	9	131	1,041	3,239	1,894	1,750	1,468	1,293	826	11,651	63.9
공주	5	117	720	2,458	1,502	1,545	1,431	1,337	1,036	10,151	65.7
보령	5	80	520	1,741	1,283	1,439	1,423	1,296	859	8,646	66.7
아산	8	109	713	2,144	1,410	1,459	1,360	1,395	865	9,463	65.8

행정 구역	20 ~29	30 ~39	40 ~49	50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세 이상	합계	경영주 평균 연령
서산	4	130	758	2,469	1,677	1,989	1,981	1,862	1,359	12,229	66.9
논산	10	150	727	2,457	1,600	1,677	1,576	1,400	975	10,572	65.6
계룡	1	10	60	152	104	76	77	42	36	558	63.0
당진	3	100	721	2,286	1,667	1,951	1,780	1,784	1,241	11,533	66.9
금산	6	67	479	1,454	983	1,044	1,028	1,036	686	6,783	66.3
부여	13	124	624	2,177	1,472	1,551	1,458	1,317	871	9,607	65.8
서천	5	71	310	1,138	897	1,156	1,138	1,139	797	6,651	68.0
청양	2	82	495	1,362	910	1,006	995	1,148	837	6,837	66.9
홍성	9	122	689	1,908	1,312	1,535	1,472	1,442	1,139	9,628	66.7
예산	3	101	631	2,169	1,504	1,653	1,527	1,650	1,076	10,314	66.7
태안	6	58	325	1,296	989	1,327	1,414	1,160	810	7,385	67.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2019년 현재 충청남도의 18~34세 청년인구는 418,868명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 대비 19.7% 차지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로는 천안시(160,562명), 아산시(64,818명), 서산시(33,532명) 순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 청년인구 현황(2019)

단위: 명, %

구분	계		남		여	
	인구수 (18~34세)	도 전체 인구 대비 (도 청년 인구 대비)	인구수	성별	인구수	성별
합계	418,868	19.7%(100%)	227,275	54.3%	191,593	45.7%
천안시	160,562	7.6%(38.3%)	84,179	52.4%	76,383	47.6%
공주시	19,110	0.9%(4.6%)	10,455	54.7%	8,655	45.3%
보령시	16,320	0.8%(3.9%)	9,205	56.4%	7,115	43.6%
아산시	64,818	3.1%(15.5%)	34,960	53.9%	29,858	46.1%
서산시	33,532	1.6%(8.0%)	19,098	57.0%	14,434	43.0%
논산시	19,773	0.9%(4.7%)	10,820	54.7%	8,953	45.3%
계룡시	8,263	0.4%(2.0%)	4,424	53.5%	3,839	46.5%
당진시	30,854	1.5%(7.4%)	17,566	56.9%	13,288	43.1%
금산군	7,064	0.3%(1.7%)	3,925	55.6%	3,139	44.4%
부여군	9,373	0.4%(2.2%)	5,240	55.9%	4,133	44.1%
서천군	6,779	0.3%(1.6%)	3,866	57.0%	2,913	43.0%
청양군	4,574	0.2%(1.1%)	2,574	56.3%	2,000	43.7%
홍성군	17,133	0.8%(4.1%)	9,244	54.0%	7,889	46.0%
예산군	11,734	0.6%(2.8%)	6,555	55.9%	5,179	44.1%
태안군	8,979	0.4%(2.1%)	5,164	57.5%	3,815	42.5%
충청남도 (전체인구)	2,125,349		1,082,259		1,043,090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19. 7.)

2019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충남 청년 농업인 수는 6,965명으로 25세 미만이 382명, 25~29세 900명, 30~34세 1,823명, 35~39세 3,860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로는 논산시가 738명으로 청년 농업인 수가 가장 많았고, 부여군이 676명, 천안시 60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9,846명이던 것이 2016년 9,144명, 2017년 7,595명, 2018년 7,284명을 거쳐 2019년에는 7천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 5년간 2,881명이 줄어들어 약 29.2%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만 2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두 해째 증가하고 있다.

[표 4]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2015~2019)

단위: 명

구분		합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19	합계	6,965	382	900	1,823	3,860
	천안시	603	30	74	155	344
	공주시	522	46	63	147	266
	보령시	501	37	60	130	274
	아산시	413	26	63	126	198
	서산시	514	25	76	121	292
	논산시	738	33	89	210	406
	계룡시	40	1	2	7	30
	당진시	471	25	59	112	275
	금산군	458	23	59	140	236
	부여군	676	35	106	161	374
	서천군	342	14	39	85	204
	청양군	338	21	45	95	177
	홍성군	557	24	72	140	321
	예산군	485	32	63	115	275
	태안군	307	10	30	79	188
'18	합계	7,284	370	921	1,926	4,067
	천안시	567	20	64	136	347
	공주시	582	40	67	162	313
	보령시	475	35	51	133	256
	아산시	446	25	55	136	230
	서산시	544	24	70	118	332
	논산시	793	30	106	226	431
	계룡시	46	0	1	12	33

구분		합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18	당진시	517	25	71	133	288
	금산군	483	25	67	134	257
	부여군	710	37	109	197	367
	서천군	349	10	33	93	213
	청양군	366	30	48	99	189
	홍성군	568	27	71	141	329
	예산군	493	28	71	122	272
	태안군	345	14	37	84	210
'17	합계	7,595	344	981	2,101	4,169
	천안시	594	19	65	154	356
	공주시	632	31	88	165	348
	보령시	467	35	58	127	247
	아산시	430	17	44	136	233
	서산시	562	31	68	135	328
	논산시	839	30	116	261	432
	계룡시	50	0	3	13	34
	당진시	561	30	71	162	298
	금산군	525	23	85	138	279
	부여군	729	37	108	204	380
	서천군	341	11	34	87	209
	청양군	386	21	54	119	192
	홍성군	602	23	66	166	347
	예산군	516	23	76	138	279
	태안군	361	13	45	96	207
'16	합계	9,144	426	1,247	2,673	4,798
	천안시	669	20	77	194	378
	공주시	771	39	129	210	393
	보령시	653	34	90	208	321
	아산시	428	11	54	133	230
	서산시	734	47	81	177	429
	논산시	933	55	127	285	466
	계룡시	46	0	6	13	27
	당진시	777	34	106	234	403
	금산군	624	28	98	193	305
	부여군	825	37	126	242	420
	서천군	383	14	45	123	201
	청양군	467	23	72	139	233
	홍성군	705	31	93	200	381
	예산군	674	31	97	190	356
	태안군	455	22	46	132	255

구분		합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15	합계	9,846	465	1,377	2,928	5,076
	천안시	806	21	94	250	441
	공주시	993	58	167	300	468
	보령시	738	51	115	223	349
	아산시	469	8	65	143	253
	서산시	840	49	96	221	474
	논산시	967	52	126	298	491
	계룡시	54	0	7	13	34
	당진시	910	44	124	287	455
	금산군	676	28	119	213	316
	부여군	888	49	127	256	456
	서천군	486	19	61	155	251
	청양군	487	21	77	141	248
	홍성군	778	29	105	214	430
	예산군	754	36	94	214	410
	태안군	529	29	53	155	292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Agrix), 농업경영체 현황, 지역별 농업인 현황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가구를 포함한 귀촌인구는 44,813명으로 2014년 대비 0.7% 감소하였고 가구를 포함한 귀농인구는 1,328명으로 2014년 대비 3.4% 증가하고 있다¹⁾.

[표 5]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14년(A)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B)	증감(B-A)
전국	귀농·귀촌인구	457,511	486,638	496,048	516,817	484,529	455,968	-0.1%
	귀농인구	17,976	19,860	20,559	19,630	12,055	11,504	-8.5%
	귀촌인구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0.2%

1) 우선 귀농귀촌 정의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이외에 농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구 분		'14년(A)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B)	증감 (B-A)
충 남	귀농·귀촌인구	47,622	49,668	52,137	50,210	48,374	46,141	-0.6%
	귀농인구	1,123	1,226	1,390	1,438	1,405	1,328	3.4%
	귀촌인구	46,499	48,442	50,747	48,772	46,969	44,813	-0.7%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2. 청년 농업인 정주 관련 정책

1) 농어촌정책에 따른 정주 관련 정책

농어촌정책 변화에 따른 정주 관련 정책 흐름은 표 6과 같다. 1970년대 국가 주도
의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이 군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90년대에는 면 단위의 정주권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정책이 발전되어 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마을과 권역, 읍
면, 시군 단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참여와 상향식 개발,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전개되어 갔다.

[표 6] 국내 주요 농어촌정책 변화에 따른 정주 관련 정책의 흐름

연대	주요 농어촌정책	정책단위	정책적 배경	관련 연구
1970 년대	새마을운동 취락구조개선	마을	새마을운동 국가주도산업화	-새마을운동 -농촌 사회구조 -농촌하부구조 개발
1980 년대	도서개발 오지개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군	정주권개발 (군종합개발)	-농촌주택 -정주생활권 및 정주체계 -농촌중심지 개발 및 기능분석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농촌마을 공간구조

연대	주요 농어촌정책	정책단위	정책적 배경	관련 연구
1990 년대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산촌종합개발	면	정주권개발 (면단위/문화마을) 행정구역 통합 (도농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단위 정주권개발 방안 -농촌 지역 개발과 정주생활권 -농어촌 중심마을 정주체계 -농촌취락 정비방안 -농촌 지역 공간계획체계 -도농통합지역 정주권 개발 -정주 공동성 -농촌 과소화지역
2000년 이후	신활력사업 관광마을조성 (녹색 농촌체험, 어촌체험, 전통테마) 소도읍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도시민유치지원 포괄보조사업	마을/ 권역/ 읍·면/ 시·군	주민참여/ 상향식개발 균형발전 복합생활권 (귀농·귀촌) 생활권 광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 -도시민 유치와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 어메니티 개선방안 -도농 통합형 정주 기반 -과소화 농촌의 지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농촌 지역개발사업 효율화·체계화 -창조적 광역발전 -기초생활권 육성 -경제·생활권 광역화 대응 -농촌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수요 대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자료: 성주인(2013) 재인용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관련 사업

청년 농업인에게 주거를 제공하자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는 2019년도에 제안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유일하다(표 7). 이와는 별도로 청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주거 부분에서는 귀농인의 집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성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표 8, 표 9). 특히 귀농인의 집의 경우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충남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56채가 운영되고 있다(표 9). 재원별로는 귀농인의 집(국비) 28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국비) 11채, 시군비 17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 10개소, 홍성군 9개소

순으로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지원 자금이 8천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사업명	목적 및 내용	상세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주거, 보육, 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 - 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의 출산률을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전국 4개소 선정(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 지구당 2년간 80억 25백만 원 지원 예정(국비 50%, 지방비 50%)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이거나,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의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 -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의무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8] 정주 기반 관련 귀농귀촌 지원 사업

사업명	목적 및 내용	상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주택 자금은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2%)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의 집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기 전 탐색 단계의 일시적인 거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거주 가능 -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조성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9] 충남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2013~2019)

단위: 채, 가구, 개월

시군	합계	재원별 수량(채)			2019년 입주실적		비고
		귀농인의 집(국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국비)	시군비	가구수	입주 개월수	
충남	56	28	11	17	123	470	
천안	0	0	0	0	0	0	
공주	3	2	0	1	5	23	
보령	2	2	0	0	3	34	2개소 3동
아산	0	0	0	0	0	0	
서산	2	0	2	0	4	28	2개소 4동
논산	0	0	0	0	0	0	
계룡	0	0	0	0	0	0	
당진	1	1	0	0	1	6	
금산	1	1	0	0	4	12	체류형 창업보육센터 제외
부여	7	0	0	7	11	18	희망센터 제외
서천	7	5	1	1	44	59	
청양	10	2	1	7	14	94	
홍성	9	5	3	1	14	85	
예산	8	8	0	0	17	71	
태안	6	2	4	0	6	40	

자료: 충남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내부자료(2019.1.~12.)

3) 충남의 청년 관련 사업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 자료에 의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주거·금융형, 생활·복지형, 정책참여형 청년 사업이다.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와 일자리노동청년과,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을 경우 소상공기업과와 식량원예과의 사업도 눈에 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과에서 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복지형으로는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

정책과와 문화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제안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권리보호 부분은 반드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농업기술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표 15와 같다. 이외에도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친환경청년농부사업과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다(표 16, 표 17).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바우처(1인 20만 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과에서 주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한편, 문화 부분의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농촌 현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충남의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충남 취업지원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교육훈련, 체험, 인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커뮤니티)	상호간 네트워크 활성화	경제실 일자리노동 청년과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경제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도제 육성	사회적경제의 우수기술전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제실 일자리노동 청년과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대학 인재 취업역량강화	
	희망이음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지원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인력 발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운영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 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GTEP(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무역 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과
해외진출	해외 복수학위제 (Dual Degree Program)	캐나다 대학 학위과정 이수 및 취업연계	기획평가팀
	해외인턴십	해외 대학 인턴십 및 취업연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1] 충남 창업지원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경영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청년CEO500프로젝트 수료기업 대상맞춤형 마케팅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청년과
	문화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문화컨텐츠 창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창농스쿨	창업역량, 리더십 교육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국제농업 및 신기술 습득 교육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창농 및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지원	농림부, 농업기술원
	초보농부 경영실천 농장 운영	영농실천농장 임대지원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자본금 지원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연간 최대 1,500만 원 창업자금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시설기반지원(1인당 4천만 원)	식량원예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자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경제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2] 충남 주거·금융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주거지원	지역사회 청년 쉼어하우스 운영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 에게 제공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 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이 자의 일부(3퍼센트)를 보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충남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 에게 제공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학자금 지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체세대 지역인재육성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3] 충남 생활·복지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건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정신·신체건강이 취약한 청년층에게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건강문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저출산보전복지실 사회복지과
문화	충남을 이끌어갈 청년 문화예술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청년학교, 커뮤니티)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알기와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인 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4] 충남 정책참여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정책제안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도내 청년의 협치인식 확산 및 도정참여 강화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권리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권익 교육 추진	노동권익 보호와 관련한 정보 제공형 교육(기초노동법 및 주요 노사문제 사례 등)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권익보호관제도 운영	근로자 노동상담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5] 충남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2019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사업 대상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17종)	1,052 (개소,명)	7,365	2,128	953	2,692	1,592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	295명	2,761	1,906	24	837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사업 대상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6개소	300	135	-	135	30	청년 농업인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기반조성, 교육 등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150명	94	47	15	32	-	청년 농업인	전문가POOL구축 경영진단 분석 현장컨설팅 지원
청년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10개소	60	30	-	30	-	청년 농업인	선도농업인 농장체류 농업기 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운영	30명	20	10	10	-	-	청년 농업인	농사체험, 정착사례 등 지역 민과 함께하는 농업의 이해 교류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11명	750	-	225	300	225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융복합 산업 중심 창농정착 기반조성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6개소	184	-	55	129	-	청년 농업인	초보농부 영농여건 탐색 및 훈련농장 장기 영농인턴 실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14개소	140	-	21	49	70	청년 농업인	네덜란드 영농기술교육센터 위탁교육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7개소	140	-	42	98	-	청년 농업인	지식재산권 도입 산업화 실천을 위한 기술이전비용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	2개소	140	-	42	56	42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기반조성, 상품 및 제품개발, 모바일 농산물 유통 구축, 컨설팅 등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14개소	70	-	21	49	-	청년 농업인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모임활 동, 부모와 자녀 공동교육 등
농촌지도자회 청년 농업인 후원결연	5개소	100	-	30	70	-	청년 농업인	농촌지도자(선도농업인)1:1 결연 기반 양도, 임대 지원
청년 농업인 신성장 활동	112명	32	-	32	-	-	청년 농업인	품목별 청년 농업인 전문분 야 참여형교육 추진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300명	27	-	27	-	-	농대, 농고생	농고, 농대생 대상 농업가치 홍보, 교육 등
청년 농업인 창농스쿨	40명	20	-	20	-	-	청년 농업인	농업 비전 인식, 환경분석, 사업계획 수립 교육
청년 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35명	2,451	-	368	858	1,225	청년 4-H 회원	영농 생산기반, 기계구입, 시설개선 등

사업명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사업 대상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14개소	70	-	21	49	-	청년 4-H 회원	4-H회원 4차산업관련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지원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 자료

[표 16]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목적	내용	상세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청년 농업인 지원. 육성단계 22명. 880백만 원(1인당 40백만 원), 창업단계 20명 지원 800백만 원	- 1인당 하우스 2동을 지을 수 있는 자금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17] 충남 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목적	내용	상세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 지원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에 대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학습 기회 제공. 총 20개소. 개소당 100~300만 원 지원. 총 6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 영농정보 교류활동 지원 - 선도농가 선배농업인 초청 강의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자료: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내부 자료

제4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실태 조사

1.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조직

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여기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장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조성은 반드시 청년층의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 청년층을 폭넓게 대상으로 두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하였다. 그 결과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과 관련한 사례로는 전국 단위에서 총 6군대를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6월에 한 차례 진행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어 10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대상지당 1~2시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자유로운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8] 청년 농업인 정주 관련 조사 대상

대상	지역	성격
이웃사촌지원센터	경북 의성군	중간지원조직 / 관과 긴밀히 연계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전북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 관과 긴밀히 연계
여민동락공동체	전남 영광군	지역 조직 / 면 단위
청년마을 청년농촌정착플랫폼	충북 제천시	지역 조직 / 면 단위
청년이그린협동조합	경북 상주시	청년 자체 조직 / 청년 농업인 대상 / 마을 단위
삶기술학교	충남 서천군	청년 자체 조직 / 청년 대상 / 면 단위

2) 심층 면담 조사 결과

(1)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지원센터

○ 면담 대상자: 유정규 센터장

○ 면담 일시: 2020년 10월 18일(일) 11:00~12:40

① 계기

경북도는 전국 11군데 소멸 고위험 지역 가운데 의성군을 비롯하여 7개소가 포함되자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청년층을 유치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본 사업은 경북도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지방소멸 1번이었던 의성군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이웃사촌청년시범조성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기존의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모아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민선 7기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관련 단위 사업이 진행되었다. 초기 구상은 의성군을 청년이 선호하는 도시처럼 만들자는 것이었지만 진행하는 가운데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총 27개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도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내에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을 만들었고 의성군에서는 시범마을조성과를 신설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청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때문에 의성군청 내 8개과 1개소(보건소)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괄과가 있어도 부서간 분산과 칸막이를 막기는 어려워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웃사촌지원센터를 만들게 된다.



[그림 2]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좌), 내부 다양한 센터(우) 전경

②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은 총 27개 사업, 6대 추진과제로 추진 중이다. 첫째 창농·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매력있는 주거단지 조성, 셋째 의료·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넷째 선·후주민간 마을공동체 강화, 다섯째, 청년유치 및 시범마을홍보, 마지막으로 시범마을연계사업 추진이다. 계획했던 예산 규모는 약 1,910억 원이지만 예산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안계면이라는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웃사촌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의 중간지원조직으로 27개 사업의 한 꼭지이면서 전체를 통합 지원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와 관련해서는 당초는 100세대씩 3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입주자 수요도 장담할 수 없어서 소규모 주택 단지를 연차적으로 짓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우선, 포스코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18세대 청년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를 완료하였고, 인근지역에 140세대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과 농촌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표 19]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지방소멸 극복 및 농촌 혁신성장 모델 제시	
목표	일자리·주거·복지가 두루 갖추어진 청년마을 조성	
6대 세부 추진분야	분야1	창농·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❶ 스마트팜 조성	

출처: 유정규(2020)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북도 교육청과 의성군이 각각 2억 원씩 마련하여 4년간 진행하는 경북형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안계에는 현재, 정원 79명의 안계어린이집이 있지만 낡고 좁아서 하나금융그룹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명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통합하여 ‘행복누리관’(200억 규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팜은 2019년 초부터 시작되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만 45세 미만의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주말에 이론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론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안계면에 마련된 스마트팜에서 영농현장실습을 마치고, 독자적인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에 교육을 마친 창업교육생 가운데 스마트팜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10명 정도는 나갔지만 일부는 창농을 했으며 나머지는 지역 선도농가에서 농가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올해도 다시 30명의 청년들이 6개월 교육을 받았고, 스마트팜에서 실습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에서는 2년간 창농실습기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창농실습비를 지원하며, 2년 과정 후 지역에서 창농할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보조금과 2억 원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에서는 이들이 스마트팜 실습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인근 폐교부지에 6평짜리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여, 거주기반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의성군 스마트팜(좌), 임시거처와 팜문화빌리지(중), 게스트하우스(우) 전경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은 도시청년과 의성군민이 매칭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에 8개팀, 2020년에는 4개팀이 선발되었다. 공간리모델링비 5천만 원과 초기 운영자금 5천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동네에는 영국의 유명 요리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파스타 전문점을 오픈하였으며, 지역의 홉 생산 농장과 수제맥주 제조기술을 가진 청년이 손잡고 수제맥주공방(호피홀리데이)을 열기도 했다.

도시청년시골과전제는 도와 군이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내려와 창업할 경우 1년에 3천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의성에도 이런 사업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다수 있다. 팜문화빌리지는 폐교 부지인 스마트팜 임시 거처 맞은편에 마련되어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과 체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은 이렇듯 지역에 청년이 들어와서 주거부터 유치원, 학교 등 교육과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주거나 일자리 등이 각각 분절되어 이루어졌으나 이 사업에서는 관련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08명의 청년들이 의성군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²⁾.

③ 이웃사촌지원센터

이웃사촌지원센터는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이웃사촌지원센터 외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3개 센터가 신설되어 현재 총 13명이 근무 중이다. 센터마다 각각의 사업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마다 의성군 행정의 관련 부서도 다르다.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직영)를 제외한 3개 센터는 ‘협동조합 함께이룸’(이사장 유정규)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4개 센터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센터장은 1인이 겸임하고 있으며, 월 1회의 통합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통합월례회의는 각 센터의 임직원 외에 행정의 담당계장과 주무관,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주무관도 함께 참석하는 민관합동회의로 진행된다.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 각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도 자연스럽게 정보공유가

2) <https://news.v.daum.net/v/20201023050646562>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3억7천5백만 원이며,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12억 원 가량이다.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도농연계사업, 기타 청년유치사업 등이 그것이다. 먼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는 마을살림꾼 양성교육, 동아리육성지원, 주민아이디어공모, 원탁회의, 지역발전세미나 등이 있다. 이 중, 마을살림꾼양성과정은 지역리더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행복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지금까지 행복마을만들기와 6차 산업 부문이 진행되었다. 역량강화교육 이후에는 2박 3일 합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충남 홍성군 문당마을을 다녀왔다. 원래는 초급(8주), 중급(8주), 합숙과정(2박 3일)으로 이루어졌으나 코로나로 올해는 기간을 줄여서 진행했다.

동아리지원사업은 건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5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하는 자금은 동아리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동아리 전체 회원들이 일일찻집을 열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주민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번은 ‘청년의 발길을 사로잡을 레시피개발’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지역 식당 20곳이 신청한 가운데 3만 원의 재료비를 주고 레시피대로 조리한 요리를 제출토록 하고, 지역 사람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가장 많은 호응을 획득한 곳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가게에 명패도 달아주었다. 이후에는 외부 손님이 오거나 행사가 있으면 해당 레스토랑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하고 있다. 다음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미래 모습’이라는 테마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제별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4번 진행했으나 익숙치 않아 쉽지는 않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역의 사업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알리는 통로 없이 사업별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도농연계사업사업에는 의성살아보기와 도시청년단체와의 MOU체결 및 팸 투어 실시 등이 있다. ‘의성에서 살아보기’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청춘구행복동사업과 예술가 일촌맺기가 있다. 청춘구행복동사업은 청년 15명을 선발하여 기본 6주 과정을 진행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시 4주간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숙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기가 진행되었는데, 제1기 수료자 11명 가운데 9명이 지역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1기에는 15명이 정원인 가운데 75명이 지원했고 2기는 115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예술가 1촌 맺기 사업은 청년 예술가들이 6개 마을에 흩어져 살아보는 것으로 한 달에서 3, 4개월을 살아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술 전공자는 주민과 벽화를 그려보거나 음악 전공자는 지역에서 합창단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공연 등 결과발표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 지역의 협조를 얻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계면은 총 인구가 4,600명 정도로 면 단위로는 상당히 큰 편으로 인근 서의성 6개 면의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의원만 10개로 독자적인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다. 의성군은 동서가 80km로 땅콩 모양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데, 동쪽에는 의성읍이, 서쪽에는 안계면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지역이 각각 동부와 서부지역의 거점으로써 청년들의 수요도 상당히 크다.

다음 사업으로는 지역청년이 도시청년과 MOU 맺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협동조합 510을 비롯한 11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각 단체의 대표를 초청해서 지역 농가들과 팸 투어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지역청년과 도시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웃사촌과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를 시작으로 소규모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다음 달 초에는 농촌 교육 살리기를,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국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한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이다.

이렇듯 이웃사촌지원센터는 각종 하드웨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직접 실행해 보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④ 농업 관련 사업

아직은 농업과 관련한 지원 사업은 도(道) 농업기술원과 군(郡)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확보 문제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 기반과 관련해서는 전제로서 공공 부분에서 농지나 농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니리하우스와 버섯 재배사를 지어놓고 귀농자가 제출하는 운영계획서를 심사해서 임대하는 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청년 창농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비롯한 농업생산수단을 공공 부분에서 많이 비축을 하고 있어야 돼. 결국 이 비축한 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정책을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 단위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중앙 정부의 정책도 추진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은 지자체 단위에서의, 소위 말하는 정책 융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그걸 정책의 깔때기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중앙에서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 사업이지만 그걸 지역 단위에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농업 부분의 신규 진입은 공공 부분에서 장벽을 낮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은 각각의 단위 사업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 면담 대상자: 김주영 대표

○ 면담 일시: 2020년 6월 30일(화) 13:00~15:00

① 계기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2013년 10월에 완주군 삼례읍에서 설립되었다. 청년들의 지역 이주와 정착을 지원해오고 있다. 비전은 ‘청년을 환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이다. 당시 공유부엌 사업으로 커뮤니티부엌 ‘모여라ㅇㅇㅇ’과 공유공간인 ‘온누리. 풀. 씨’로 10명이 시작했다. 활동으로는 지역문화기획 ‘콩낭콩낭’과 청년지원 사업 ‘비밀언덕’, 마을교육활동 ‘마을과 미래’ 등을 해왔다. 구성원은 대표 1명과 사무국장 1명, 청년활동가 5명, 미디어센터 5명, 조합원 20명이다. 2017년 3월에 고산면으로 이전했다. 현재 김주영 대표는 완주미디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10평 규모로 5명의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 받고 있다.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년 정책 수립 연구 및 청년 종합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림 4] 완주군 공동체미디어센터(좌), 거점공간 림보책방(우) 전경

② 씨앗[C.Art](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은 2014년부터 2016년에 진행된 삼례문화예술촌 숙박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의 청년사업에 관여해 왔다. 숙박체험관은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500평 규모로 내부에는 숙박체험관과 한겨레 청춘스테이션 1호점이 상주해 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행된 토요문화장터인 콩낭마켓은 문화상품과 수공예품,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과 지역이 만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주 청년 30여명이 참여했으며 50여회 개최되었다.

‘모여라 〇〇〇’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콩남마켓 참가자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요리나 바느질, 수공예 등 매번 컨셉은 다르다. 현재는 커뮤니티부역으로 발전했다. 청년귀농귀촌캠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어 총 11회에 걸쳐 150여명이 참가했다.



[그림 5]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출처: 씨앗 안내 자료

③ 완주군 청년정책

완주군은 2020년 5월말 현재 전체 91,835명 가운데 청년 인구는 19,7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5%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전북에서 가장 넓으며 서울시 면적의 1.3배를 차지한다. 북부는 농업지역이고 공단이 있으며 이서면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도농복합도시다. 중소도시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로컬푸드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의 메카이며 군 단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청년정책인 ‘JUMP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청년정책이 행정 조직인 청년정책팀과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의 끈끈한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구정책 차원에서는 출산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청년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많이 늘지는 않지만 ‘정착과 자립’ 측면에 힘을 쏟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는 제론토크라시, 즉 원로에 의한 지배를 지속시켜 청년이 소외되고, 청년이 감소하게 되니 다시 고령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교육과 성장, 교류 기회 부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도시에서는 끝나지 않는 미션을 수행하는 RPG(Role Play Game)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구조 속에서 생태적, 대안적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을 찾아오는 청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창직의 과정이 필요하며,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거나 건강, 금융, 문화, 진로모색 등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용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그 규모와 범위는 물론 내용과 형식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고산면과 지역 차원을 달리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나가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부터 군 단위에서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2016년 8월)하고 청년기본계획(같은 해 8월)을 수립하였으며, 완주군 청년기본조례(같은 해 12월)를 제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주 청년정책 JUMP프로젝트’는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 노력과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JUMP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고 도시청년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청년 문화 및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자는 것에서 시작되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2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취업·창업), 머물고(주거·정착), 어울리고(참여·교류), 성장하는(교육·문화) 토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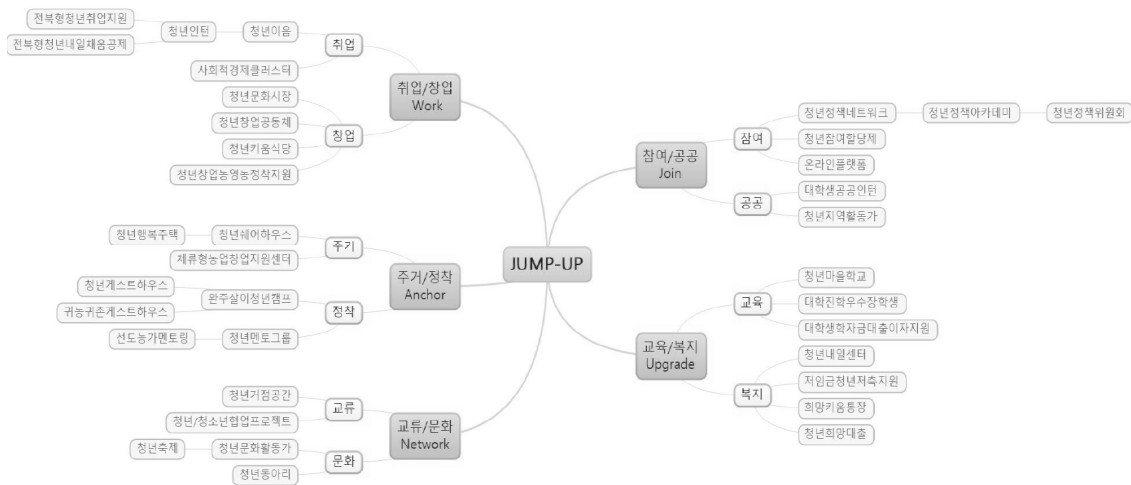
JUMP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으로 우선 청년쉐어하우스는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현재 9개소로 35명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거점공간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좌나 동아리, 문화 활동 등 청년들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3개소에 만들어졌으며 고산에는 책방이 마련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2억 원 예산으로 15~30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청년정책이장단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청년창업공동체도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청년 공동체 3명의 창업을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019년까지 14개 공동체가 참가했다.



[그림 6] 완주 JUMP프로젝트

출처: 김주영(2020)

현재는 JUMP-UP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지난 3년간의 JUMP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청년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기존의 이주 및 정주에서 나아가 다양한 실험과 교류를 늘려가야 하며, 교육과 문화,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군정 각 분야 및 부서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이다.



[그림 7] 완주 JUMP-UP프로젝트

출처: 김주영(2020)

③ 향후 계획

현재 지역에서는 지역자산화 청년지원플랫폼인 ‘다움타운(가칭)’사업이 한창인데, 행안부 저리대출 사업으로 200평 규모로 게스트하우스와 공유부엌, 공유사무실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고산다움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여기에는 씨앗을 포함하여 3개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농업 부문에서는 고산 지역에 청년 농부가 2~3명 정도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정보 교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청년 농업인들끼리는 함께 모이는 일이 많다. 인근에는 전북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인 청년공유농장이 있으며 ‘씨앗받는 농부’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0여명이 모여 토종종자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청년정책은 성장과 자립, 참여, 연결의 기회 제공 쪽에 목표가 맞춰져야 하며 농촌 지역에서 자본과 인맥,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며 행정 위주가 아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완주군에는 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 지원센터도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청년들의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

○ 면담 대상자: 권혁범 대표

○ 면담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16:00~18:00

① 계기

최근 여민동락공동체에는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작년에는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야생화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취지에 동감하고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보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회적 농업 지원 인턴으로 현장실습을 위해 서울시 청정지역 프로젝트³⁾ 차원에서 청년들 받아들였다. 9개월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마을복지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인 여성 청년 4명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청년 농업인의 경우 농업 기반에 더하여 주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급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주거 같은 경우는 마을의 빈집을 4채 빌려 절반은 리모델링하고 절반은 빈집 그대로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2채의 리모델링 비용은 영광군에서 지원받았다. 빈집은 대체로 도시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작년부터 상주와 보성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다. 형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읍 단위 300호로 시작되었으나 논의 끝에 소규모주택사업으로 단독주택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텃밭까지 조성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민동락에서는 지역사회 기반형으로 모집과 운영까지 지역사회가 맡는 형식으로 LH는 지원만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러한 자체 커뮤니티에 맞는 가구들을 직접 선발할 계획이다.

3) 서울시 지역상생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청정지역 프로젝트”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청년들이 9개월 동안 지역에 내려가 근로활동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음. 세전 월 220만 원 급여보장. (<http://www.youthstay2.org/>)

② 여민동락공동체

현재 묘량면은 교육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공간혁신사업⁴⁾을 시행 중이다. 농촌형 미래교육모델과 연계하여 기존 학교와는 완전히 다르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다.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학부모와 함께 모집, 절차, 교육 과정까지 지역 내부에서 결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 살리기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도 포함된다.

마을 내부적으로는 2017년부터 지역활성화추진단을 결성해서 마을이 처한 다양한 농촌문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마을 내부의 다양한 주민과 면장, 군·면 사무소 공무원, 젊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만나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협정을 맺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서는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의제별로 준비해오고 있다. 교육·문화 분과는 묘량중 학부모 회장과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는 깨움마을교육공동체 대표가 맡아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 분과는 권혁범 대표가 주축이 되어 주택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제 분과에서는 농민회 출신으로 언니네 텃밭에 친환경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농가가 주가 되어,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분과에서는 광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문제 논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추진위원은 총 18명, 분과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에 묘량면은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⁵⁾의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복합공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맡을 주체가 없던 와중에 지역사회단체장 회의에서 거론되어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과 주택, 문화·여가,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연계, 융합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4)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이외에도 학생, 교사, 지역주민,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교공간혁신 추진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특성과 다양화, 차별화 수용 여건에 따른 단계적인 추진을 해가고 있다. 2019년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올해 확대해 가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http://xn-s39awrqin57eq9u52a.kr/research/school.php>)

5)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임.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귀농귀촌사업을 하자.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제안했던 게...먹고사는 것도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니 각 부처 사업들을 다 연계 융합을 해야 한다. 교육문제, 주택문제, 문화, 여가 문제, 일자리 문제를 같이 가야한다. 이걸 연계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고 면과 군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말에 인구 구성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10년의 구상과 실천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단체장, 지역학부모, 청년들, 면사무소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 발표를 했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단이 꾸러지게 되었다. 올해 1월부터 분과마다 의제를 짚어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8]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전경

그 분과 중 하나가 교육, 문화 분과였고 주요 의제가 학교공간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를 해나가던 중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초중통합혁신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재 12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는 7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늘었다. 원래는 무지개학교라는 초등학교 대상 혁신학교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초중학교를 통합하자고 제안하게 되어 초중통합혁신학교로 전환되었다. 지역에도 초등학교는 혁신학교가 많지만 문제는 중학교다. 공간부지 문제에서부터 복잡하지만 공식 건의를 거쳐 교육부 내부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재 지역면장과 지역단체장 등 지역의 동의만 남은 상태이다. 그렇게 교육선도지구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 미래교육주거 선정이 되면 다시 또 40억 원 정도의 지원이 따른다고 한다. 지역 문제는 교육의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초중통합혁신학교까지 되면 도시 학부모들이 이런 시골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살리기를 염으려는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LH사업이 연결되었다. 시골주택문제는 농촌 정책의 중요한 사안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민동락에서는 LH주택사업의 모집부터 운영까지 지역사회가 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단체장도 함께하기로 했다.

LH주택사업은 20동 단독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용면적 20평 10채와 15평 10채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 30년 공공임대주택 방식이나 분양도 고려하고 있다. 위치는 마침 인근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 군에서 매입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다. 올 초에 정부 5개 부처가 지역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사업과 교육부 사업, 국토교통부와 관련있는 LH사업을 기획재정부 땅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라고도 얘기해 둔 상황이다. 토지는 임대인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꺼리는 편이지만 LH나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협의를 거듭해 가고 있다. 주택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귀농귀촌사업으로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해갈 예정이다. 기존에 마을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 그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쓸 계획이다. 새로 짓게 될 공간과 겹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제과제빵과 카페, 선술집, 중국집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마침 행안부에서 청년 활동을 위해 실시 중인 인구감소지역통합사업⁶⁾을 연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다. 아직 제안 단계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여민동락에서 나와서 새로운 팀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한국형 지역부흥협력대⁷⁾라고 할 수 있다.

6) 행안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억 원 규모로 청장년과 귀촌인들의 창업 지원, 소통·교류 공간 조성, 주거 공동시설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 20개소에서 297억 원이 지원되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70371)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일종의 한국형 지역부흥협력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민동락에서 빠져나와서 팀을 꾸려서 추진해보고 싶어요. 청년들을, 외부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데려오라고 해서 인건비 3년 정도 지원해주고...그리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 창업공간을 활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속가능해야 하니깐...”

마을에서 여러 일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하겠다. 무주군 안성면에서는 소멸지역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도 차원에서 농촌과소화대응인력 육성사업⁸⁾이 이루어졌는데 도·군비 3:7로 10명의 청년을 마을에 데려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중앙부처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군과 도 단위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이라 무주의 경우도 3년 진행하고 끝이 났다. 지역에는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기반이 튼튼해서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걱정 규모가 확보되지 않는 한 쉬운 작업은 아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SNS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③ 향후 계획

현재 청년들에게 10개의 임대주택을 내어줄 생각인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는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면단위생활권혁신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읍 단위 또는 영광군 단위에서 필요한 곳에 매칭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인건비를 3년은 지원하면서 청년에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을 통합,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적인 부분만으로는 안되고 지역 조직이 중심이 되고 국비 사업과 연계한 형태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은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제2장 1절 가운데 일본 사례로 다루었다(8~11 페이지 참조).

8)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은 농촌에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성화, 농촌과소화대응활동을 기획할 인력을 선발하여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사업이다.

현재 여민동락공동체 출신 청년 2명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관계망 속에서 지역에서 함께할 핵심동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묘량면의 인구는 현재 1,800명 선이 무너졌다. 1,795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20대는 2명이었고, 30대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묘량면의 농업은 쌀과 축산, 밭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사는 5~60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계농을 중심으로 대농이 장악한 상태이다. 중소농은 특용작물 생산이나 가공, 유통이 중심이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 속에 새롭게 청년이 들어와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구할 수가 없다. 구한다고 해도 돈이 되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점점 더 지역 출신의 후계농이 자리잡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여민동락공동체는 논 3,000평과 시설 하우스 100평 규모 3동과 밭 4,000평을 가지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농사지으려는 청년이 있으면 여민동락 농장 책임자로 농사를 넘길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생각이지만 버틸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

(4) 충북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청년농촌정착플랫폼

○ 면담 대상자: 한석주 대표

○ 면담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4:00~16:20

① 계기

한석주 대표는 제천시 덕산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안교육에 뜻을 품고 성미산학교 창립 활동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제천의 간디학교에서 일하면서 이곳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덕산면은 제천 간디학교가 있는 곳으로 교육적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까지 간디학교 관련 일을 해오다 이후에는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농촌공동체연구소를 만들어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사회적 경제, 문화, 교육 활동들을 해왔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청년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이제 15년 정도 돼가니까 똑같이 서른아홉 살 때 내가 켈 젊었는데 지금도 제일 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젊은 애들, 사람 선순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농촌에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사회적 농업을 활용해서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고 경쟁적인 삶을 지속해 오고 있다. 관혼상제가 동네에서 가능하던 시설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자급경제의 붕괴로 공동체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탈농촌과 일자리 문제, 고령화 등의 문제에 더하여 행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서비스는 줄어들고 그러니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반대로 다시 관련 서비스를 회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누가 유지하고 만들어 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오다가 2005년 농촌 지역으로의 정착을 결심했다. 해답을 사회적 경제에 두고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다.

“농촌은 주민의 삶의 질, 이게 켈 중요한데, 일단 마음속으로 자기 가치가 자궁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행태로 가면 땅은 생산력이 켈 낮기 때문에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 농촌은 좀 더 좋은 교육, 문화, 의료, 복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게 이동권이잖아요...”

이동권과 관련해서 현재 제천에서는 덕산까지 직행버스가 있는 상황이고 덕산 내에는 마을순환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마을버스를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제안도 했지만 안전을 문제삼아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내의 사람의 선순환이 필요하고 또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삶의 질을 항상 우선에 두고 사람의 순환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서비스의 순환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레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덕산면 지역 활성화 활동

덕산면은 2002년 제천간디학교가 이주하면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새로운 동력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빵집이 사라지면서 빵 두레농장

이라는 빵집을 만들었고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목공소가 생겨났다. 교육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이 생겨났으며,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작업장 등을 하나씩 마련해 갔다. 재원 조달은 사회와 소통하며 규모에 맞게 필요한 것을 조달해 왔으며,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동과 참여를 독려하여 십시일반 자금을 모았고 민간 후원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다문화 관련 교육과 아름다운 재단, 마을밴드, 전통시장 살리기, 문화만들기, 지역의 보육에 관해서는 여성 재단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일자리, 6차산업, 사회적 농업은 국가사업과 연계하면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림 9] 제천시 누리마을 빵카페(좌), 사회적 농업 블루베리 농원(우)

비전으로는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는 삶의 질과 기본권 보장이며,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교통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교육인데 혁신학교인 덕산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돌봄센터를 활용한 일들을 해나갔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넘게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자원의 선순환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복원하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제도로써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스스로 운영해가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농장인 바보농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람 선순환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과 청년 정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밖에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오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면 올 사람이 많은데 굳이 데려올라고, 안 올려는 사람. 돈을 엉뚱한데 쓰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팍팍 써가지고, 그럼 되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다 나설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청년과 노인이 연계한 우리마을119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춘천에서 시행한 것으로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청년을 노인과 연결해서 리모컨 고쳐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든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 지역의 이웃을 만들어 가게끔 하자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농촌 정책의 실패로 농촌이 사멸한다는 경고도 있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의 생산농업에서 농업의 다기능을 활용하여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에 제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지, 일자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장 농촌적인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05년에 내려온 이후 2007년에는 학교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배움과 삶 터를 연결하는 간디공동체 활동을 했고, 간디교육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당시 자공심 회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008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누리어울림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 공동 육아를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2009년에는 다문화 카페를 만들었다. 생활단위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면 단위의 다문화 공동육아는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문화 가정의 보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협동조합 운동도 진행했고, 좋은 밭 사기 운동과 공유지만들기 운동 등을 해나갔다.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 6차 산업,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와 토지공유 등 협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11년에는 농촌공동체연구소 운동을 했으며 그때 간디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지역에서 학교 문제는 심각해서 중학생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는 일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재단 공동 모금회와 농촌희망재단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의 농촌의 추억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농적 가치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③ 청년 플랫폼 활동

지금은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청년마을이라는 청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대농이 아니면 농사짓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승계농이 아닌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농업은 더욱 난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장점을 살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소규모라도 만들어 보게 하고, 도시와 직접 소통해가면서 스스로의 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경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정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 한 사람과 농업, 문화, 복지 등 여러 다양한 과가 연계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면 단위 실행을 기반으로 생활 단위에서 종합해 나가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 접근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농지트러스트 활동을 통해 공유 토지를 활용한 농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재산으로 5개 농장이 마련되어 있다. 천 평은 기부를 받았고 한 교사가 천 평을 내놓았다. 1,500평은 대표 소유이고 900평은 친척의 농지다. 현재 1명과 청년 2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주고자 하고 있다. 3년간 최저임금을 주고 있으며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농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청년 농부 프로그램으로 1회 4시간씩 주 3회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간디농장 사업과 청년마을배움터 작업장 프로그램으로 1년에 4학기 24강좌를 개설하여 2명 이상의 청년이 모이면 수업을 만들어 3년 이상은

진행해보자는 원칙하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청년 작업장은 청년들이 자신이 안 쓰는 부분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일이 되도록 전문가를 만나서 배우고 기능을 익혀서 창직할 수 있도록 독립을 돕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꿈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은 없어졌던 서비스가 하나 생기게 된다. 하지만 둘 다 쉬운 과정은 아니다. 주민이 누리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결과물이 상품이 되고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혹은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이나 동아리 등 지역과 연결되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숙박과 관련해서는 18평 펜션 3동을 마련하여 숙소와 베이스캠프로 활용 중이다.

현재 청년 8명이 일자리와 영상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농장에는 청년이 상근으로 7명 있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농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의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4명이 활동하고 거점농장 사업으로 4명이 일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을 권유한 상태이다.

“내년에 이 친구들이 몇 명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해 가는 과정 5년을 지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년을 지원하는데 첨에 와서 살아보는 거 1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면 사회적 경제로 인큐베이팅 해 주는 거 뭐 이런 거죠.”

간디학교 출신자들 가운데 100명 정도가 귀촌했다.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농촌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농촌은 여전히 바뀌기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중앙 정부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농업, 6차산업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자체와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천천히 가자는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연결고리를 강하게 가져가고자 하고 있다.

④ 향후 계획

향후에는 이러한 청년 정책 플랫폼이 캠퍼스 기반의 공간과 숙소를 갖추고, 마을 배움터가 확대되어 인문학 기반의 교육으로 정착하며, 이러한 청년 네트워크가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여기 와서 배우고 싶은 곳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을대학을 넘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농촌 사람들이 함께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 청년 농촌 지역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농촌의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술과 접목하여 아시아 농촌 지역의 공동체 연대를 꿈꾸고 있다.

(5) 경북 상주시 이안면 청년이그린협동조합

○ 면담 대상자: 백아름 대표

○ 면담 일시: 2020년 10월 18일(일) 15:40~18:00

① 계기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이 마을의 이장님을 사회적기업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을 소개받게 되었고 폐교라는 공간에 매력을 느껴 청년 3명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각각 준비하고 있었는데 망하기도 하면서,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각자 고민하기보다는 같이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보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장님의 제안으로 2017년 말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 위주의 농산물을 판매해나갔다.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만으로는 기반을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면서 판매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폐교를 활용한 공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이장님이 이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알리던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정착에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 제안하게 되면서 경북도에서 청년 농랜드 사업⁹⁾을 만들어 폐교 공간 활용 사업을 시작했다.

9) 청년 농랜드 사업은 현재 청년농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부르고 있음.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대표자는 청년에 한함(청년 주도형 사업형태). 신청 자격은 청년 3인 이상 참여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로 사업비는 개소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농랜드 사업은 5억 원 한도의 사업으로 마련되었는데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라 자부담이 20%로 부담이 커서 3억 원 규모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자부담 6천만 원은 협동조합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간 사업과 협업농장으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여러 가치적인 일에 대해서 고민해 오던 차에 마을 이장님이 1980프로젝트라는 마을의 생태환경을 1980년대로 돌려보자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어 그 가치에 맞게 마을과 함께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장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마을에 비가 많이 오면 논둑까지 봉어랑 민물새우가 올라와서 잡아서 말릴 정도였고 다시 마을의 환경이 복원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청년들도 찾아오게 될테니 그러한 자원으로 자립적으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게 된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협동조합 가치도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두고 즐겁고 행복한 농촌이라는 의미로 농락(農樂)이라 이름 짓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가치 복원에 동조하여 농업도 유기농 생산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메뉴를 개발하여 카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저희도 그 가치에 동조하고 그 가치 안에 협업농장에서도 유기농 농사를 짓고 저희 판매하는 것도 유기농, 친환경만 생산하고, 카페는 지역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만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예정이고. 일단 농사팀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공간사업에 관한 것들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현재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업체에 의한 컨설팅이 아니라 모니터링 작업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청년들이 해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MOU를 맺고 마을과 자원관이 함께 깃대종¹⁰⁾을 살려나가는 작업을 계속해가고 있으며 생태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

10)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동식물의 종

② 청년이그린협동조합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은 청년이 7명이고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같이 일하는 청년은 5명 정도이고 2명은 오며가며 도와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준회원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있다. 폐교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참기름과 들기름 가공장, 목공방, 허브 명주 공방과 카페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2층은 청년사무실과 곤충체험전시관, 게스트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학교 뒤쪽으로는 관사도 마련되어 있어 숙소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관사에는 남녀 청년들이 기거할 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마을 안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2명이 살고 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지만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랑 여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랑, 드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사실은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일단 농사를 지어야 하니깐, 땅도 있어야 하니깐 내려와서 받은 집도 없고 해서 지역에 어떤 관련된 공간이 있을까... 공간활동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카페, 도서관 만들고 하는 게 지역주민이 같이 쓰려고 하는 공간인데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니깐... 그래서 재밌는,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닌가 해요.”

공간팀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공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서울시와는 청년사업인 ‘별의별이주’와 연계하여 2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렇게 연계해서 많은 청년들이 오고가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청년협동조합의 목표도 귀농귀촌의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협동조합이 하려고 하는 가치적 목표에 맞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관심을 갖는 청년이나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함께 일할 청년 채용공고를 냈는데 관심 있게 보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었다.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1년 정도 장기간 거주할 청년이 다음 주 정도부터 함께할 예정이다. 숙식을 제공하고 수익 활동도 같이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있고 지역 활동으로는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의 운영비는 협업농장에서 농사지은 것과 농산물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청창농 사업비를 함께 쓰기도 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일을 도우면서 일부 인건비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 삼선재단 지원금으로 2명의 청년 인건비를 마련하고 있다. 삼선재단에서는 1년 차에는 50만 원을, 2년차에는 30만 원을 최대 2명까지 2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는 그만둘 생각이다. 현재 농산물 판매로 인한 매출은 연간 2천만 원 정도이며 청년씨앗농부 사업으로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그림 10] 상주시 청년이그린협동조합 폐교 활용 전경

현재 협업농장 규모는 오이 400평, 1,200평 시설하우스에서 고추를 생산하고 있고, 쌀 700평, 콩 600평이다. 임차비는 쌀 마지기로 지불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장님의 도움으로 땅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좋은 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지역 어르신들이 임대해 주는 대로 농지를 확보하고 있어 농장 위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③ 어려웠던 점

폐교를 활용한 공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원래는 공부방으로 사용하다가 비게 되면서 현재는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 임대하고 있다. 연간 2~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폐교는 교육청에서 임차하는 형태여서 교육청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업과 관련하여 가공장이나 카페로 쓰기에는 허가 문제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폐교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만 관리해주고 폐교의 경우는 임대만 해주고 방치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비가 새는 문제들이 있어 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임대한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농랜드 사업으로 폐교 내부 리모델링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개보수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문제는 외부의 노후화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외부 수리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성과는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측면이 있다.

상주시 농정과 차원에서는 국비 사업인 청창농 사업을 관리하고, 마을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수리해주는 정도로 관련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을 찾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사를 귀농인의 집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교육청 건물이라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고 마을 빈집의 경우도 귀농인의 집으로 허가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농랜드 사업도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차라리 스스로 하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어렵게 여러 방면으로 숙소를 확보하다 보니 이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활용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당초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협동조합과 상의하는 조건이었으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④ 향후 계획

이곳 마을에서 평생을 살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청년에게 적합한 다품종소량 생산을 통해 카페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이나 판매, 체험활동과 연계한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이다. 상주는 문화나 의료 생활권으로는 문경까지 10분 정도의 거리라서 아쉬움은 없다. 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필요하면 도서관에 빔을 쏘아 영화를 본다든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지역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 청년과 특히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상주다움을 갖춘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플랫폼으로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며 지역의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현재 더 필요한 것으로는 다양한 공유공간이다. 관사를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방만 2개 있는 환경이라 공유 부엌이나 쉬는 공간 등이 아쉽다. 더불어 마을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가공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HACCP을 갖추어야 하는 등 시설비용과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 부담이 된다. 정책적으로는 정착 전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청년의 경우 이동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라 공유차 같은 것이 있으면 활용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유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오픈되면 좋겠고 이미 마련된 시설을 활용하게 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스스로 채워나가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다.

(6)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 면담 대상자: 김혜진 (주)자이언트 콘텐츠기획팀 팀장

○ 면담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4:00~16:00

① 계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한 삶기술학교는 청년 창업 기업으로 설립된 (주)자이언트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으로 마련되었다. (주)자이언트는 8년 전에 만들어져 I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산업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는 플랫폼 사업을 해 왔다.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는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마련되어 있다. 서천에는 문화이벤트 지사를 두고 있다. 총 16명이 일한다.

서천군과의 인연은 3년 전, 한산모시문화제를 위한 문화기획단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이 문화기획단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축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군이 제안하였고 (주)자이언트가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한산면에는 2,7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청년 인구는 6% 수준으로 청년층의 도시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 한산면이 가진 한산모시와 소곡주라는 지역의 자원에 매력을 느끼고 이러한 지역 자원을 청년이 중심이 되어 문화로 이어지게 하고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는 일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한산면에는 67군데의 소곡주 가양주 업체가 있는데 2년 전부터는 소곡주를 테마로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고자 하고 있다.

② 삶기술학교

삶기술학교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협업과 사업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¹¹⁾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8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취지와 비전으로는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 “당신의 삶기술이 마을이 됩니다”라는 비전 아래 ‘지친 도시청년들이 시골 마을에서 서로 삶의 기술을 교환하며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자립 공동체’를 꿈꾸고 ‘삶기술학교는 교수도, 학생도 없는 마을 캠퍼스에서 삶기술자(삶지니)가 되어 자립하기 위한 삶과 일을 배우며 나만의 삶기술 프로젝트를 실험’해 나가고 있다.

삶기술학교는 삶에 필요한 의식주 기반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과부화된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삶지니’의 ‘지니’는 엔지니어의 준말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삶의 기본적인 기술은 서비스로서 사게 되는데 손으로 직접 기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지해도 생겨나고. 이런 것을 배워보지 못한 거죠... 창직에서 창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3년 전에 빈집을 리노베이션한 노란달팽이라는 청년 거점 시설을 시작으로 지난해 행안부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필요한 공간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갈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는데 주력할 수 있었다. 행안부의 예산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고치는 비용은 물론 교육과 인건비 지원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덕분에 5명의 청년을 고용하여 청년 사업을 진행했다.

삶기술학교는 자연과 생태에 기반하여 지역의 전통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을 유입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 의식주를 기반으로 명인에게서 직접 기술을 배워서 본인의 기술에 접목시켜 나가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한 달 주거비를 내고 서천에 내려와 살아가면서 삶기술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아래 생활해

11)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1개팀을 선발하였고 2년간의 좋은 결과 덕분에 내년에는 10개 팀을 선발하기로 결정됨.

보는 형식이다. 작년 첫해에는 힐링이 위주였다고 하면 올해는 공동체 활동이나 요가, 요리, 반려동물 등 테마형으로 엮어서 다양한 교육과 연계하면서 한 달을 살아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현재 15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다. 이들 청년 가운데는 한산소곡주를 만들고 난 찌꺼기인 지게미를 활용한 빵가루로 만든 돈가스 식당을 11월 7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또 한산모시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어 펀딩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서천이 가진 생태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즐기는 요가를 통해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이 주소지를 서천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빈집을 고쳐 사용하고 있거나 군에서 마련한 셰어하우스를 임대해서 살고 있다.



[그림 11] 서천군 삶기술학교 ‘한산한오늘’ 카페 전경

작년에는 카페 겸 돌봄교육 공간으로 ‘한산한오늘’이라는 카페를 오픈하였고 이곳 청년들의 재능을 살려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돌봄강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 모델로는 마을의 여관을 매입하여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산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공동체 협력 노력을 모델로 하고 있다. 본사에서 자금 용자로 건물을 매입하여 행안부 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등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삶기술학교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③ 어려웠던 점

처음 이곳에서 어려웠던 점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빈집을 찾으려 마을의 여러 부동산을 다녔지만 집이 나온 곳이 없어 결국은 면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 6개월 만에 빈집 2개를 빌려 고쳐서 3명씩 6명의 청년들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주택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최근에는 비인면에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중이다.

더불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목표치를 만들어가면서 밸런스를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으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편차와 세대차이가 있어 문화만들기 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다.

④ 농업과 지역 청년과의 연계

서천군을 찾는 청년 가운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내려오는 청년은 매우 드물다. 한 달 살아보기를 통해 농사짓기를 꿈꾸고 내려온 청년도 있었으나 결국은 사정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 이곳에 내려와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어서 지역 청년과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청년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교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에 비해 배타적인 편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지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인데 최근에는 마을정비사업과 김장만들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부녀회와 함께 진행했다. 또 얼마 전 화재로 전소한 주택이 있어 건축을 전공한 청년이 무상으로 집을 다시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애초에 한산모시축제 청년기획단으로 들어오면서 믿고 맡겨준 덕분에 이곳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이제는 생활권으로 가까운 곳에 군산도 있어서 문화나 의료 같은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군에는 오케스트라도 2개나 있어 문화 이벤트가 자주 열리고 있으며 근처 학교는 혁신학교로 방과후 학교 등 이와 연계하여 음악이나 반려동물 프로그램, 빵만들기, 목공기술 등 다양한 돌봄강사 일도 청년이 함께하고 있다.

⑤ 향후 계획

처음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근처의 향교인 유림회관 한건을 사무실로 빌려 쓰기도 했는데 현재 디지털노머드를 실현하기 위해 유림회관에 언택트 센터가 곧 오픈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라인 기반에서 여러 청년 개발자들이 농촌의 지역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 기업 공간을 만들기를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을호텔사업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통해 삶기술 프로젝트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자 하고 있으며 본래 잘하던 영역인 온라인 기반을 통해 홍보하는 일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작년까지 행안부 사업으로 교육 커리큘럼은 무상으로 진행이 가능했고 사업이 끊어지게 되자 충남도 공동체정책과와 서천군의 도움으로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업적으로는 청년층을 겨냥하여 소곡주를 새롭게 블랜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곡주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강한데, 코로나로 매출이 30% 가량 떨어진 실정이라 온라인을 통한 소곡주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한산면에서의 도전을 서천의 다른 곳에서도 활용하도록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청년 지역 정착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생각이다. 지역의 정보를 가다듬어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가고자 한다.

3) 소결

(1) 소결

이상의 선진 사례 실태 조사 및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전국 단위에서 청년층의 이주를 도우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성군의 이웃사촌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군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형태로 연계하여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고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우선 면 단위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도전을 해나가고 있었다. 지역 현장의 수요를 중간지원조직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이 정책으로서 끝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민과의 소통 과정에도 일단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막대한 정책 자금이 시설에만 쏟아지고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많은 사례와는 다른 형태로 지자체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가 모아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완주군의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완주군의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완주군의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관여하면서 숙박체험관과 장터 등 청년의 주거 공간은 물론 청년들이 함께 만나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감하는 거점 공간들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완주군의 청년정책 JUMP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협업으로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해가는 활동들을 지속해 왔다. 현재 카페를 포함해 3가지 거점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지원플랫폼을 지역자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시의 청년마을 청년지역정착플랫폼의 경우는 덕산면이라고 하는 면 단위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자생 조직 차원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였다. 간디학교라는 교육 거점을 활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들어오게 된 여러 사람들이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반 아래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교육하고 복지 활동을 주도해가면서 정주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현재는 사회적 경제의 농촌 영역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공유농장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가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는 묘량면이라는 면 단위의 고령화 문제를 기반으로 마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관련한 활동을 해오다 최근에는 지역에 초중학교 기능을 살리는 것이 젊은 층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접목하여 면 단위 교육 기능의 강화를 통해 젊은 층의 정착 지원을 연계해나가고 있다. 국비 사업 연계를 통해 마을 기반과 관련한 시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회적 농업 농장을 기반으로 농업 활동도 활발히 해나가면서 농장에서 함께

일할 청년과 노인복지를 위한 청년 사회복지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특히 LH주택임대사업이 연계되면 거주 기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주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은 마을에서 농사짓기를 희망하고 내려온 귀농 청년들이 이장님의 도움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 스스로에게 필요한 문화와 복지, 교육 공간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간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설계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주민들과의 상생의 결과는 농지 접근도 원활한 형태로 이어졌고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함께 가공하는 형태로 6차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청년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가면서 지역의 다양한 마을 활동까지 확대해가고 있다.

서천의 삶기술학교는 서천이 가진 지역의 자원에 매력을 느끼고 서천에서 정착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새롭게 내려오고자 하는 청년들의 지역 이주를 돕고 있었는데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커리큘럼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면서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을 탐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진 재능을 살려 다양한 국비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있었고 과감한 투자로 스스로 거점 공간들을 조성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려온 청년들은 다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을 함께 만들어갈 지역 자원으로 안착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한 일에 연계되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여섯 군데 사례는 기본적으로는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지역으로의 이주를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역 차원의 문제로는 마을의 생태와 환경을 지켜내고 이것을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조금 더 크게는 과소화로 인한 마을 소멸이라는 위기의식과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시군 단위에서는 정책적 차원의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목표가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체적으로 국비 사업이나 도 단위 사업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제천시의 경우 간디학교라는 교육적 기반에 더불어 혁신학교 관련 사업이 지역에 들어와 있었고 최근에는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 농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기초생활거점사업과 같은 농촌정책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고 반드시 농업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교육부와 도 교육청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천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행정안전부 사업이 농촌 지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었다. 의성군은 도와 군 사업이 전략적으로 투입되고 있었고 상주의 경우에도 도 사업을 통해 기반을 정비했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반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사업들을 통해 관련 활동들을 연계해나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천의 경우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은 도, 군 사업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었고, 현재 도시 청년들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는 행안부의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노마드’ 사업이 연계되고 있었다. 영광의 경우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부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교육 기반을 마련한 후에 이러한 사업을 거점으로 새롭게 지역으로 유입되는 젊은 층을 위해 LH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받아들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의 형태로는 ‘공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완주군의 게스트하우스사업으로 조성된 500평에는 창업 공간이 들어설 수 있었고, 이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거점 공간들이 조성되고 있어 청년들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상주시에서도 폐교는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도 활용되는 문화, 복지, 교육 공간으로서 설계되고 있었으며 청년들을 위한 거주 공간과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완주와 서천의 경우는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공간 조성에 활용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수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공간 조성’을 통해 채워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1) 수요 조사 개요

여기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는 농번기로 인해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10월 21일(수요일)과 22일(목요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3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처해 있는 정주 기반과 관련하여 여건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여러 지역의 청년 농업인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1차 간담회에는 예산군에서 2명, 홍성군 7명, 청양군 1명이 참석하였고, 2차 간담회에는 논산시 5명, 부여군 4명, 서천군 4명이 참석하여 총 23명이 함께했다.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 사업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받고 있었고, 국비 사업으로 충남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이기도 했다. 총 23명 가운데 여성은 5명이었다.



[그림 12]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 홍성(좌), 부여(우) 전경

2) 수요 조사 결과

현장 간담회 결과는 크게 주거 문제와 이외에 농업 관련 시설, 문화, 복지, 의료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한다.

(1) 주거 문제

○ 빈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농사짓는 것에 선행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쉽지 않다. 새롭게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아 빈집을 구해야 하는데 빈집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빈집은 보통 도시에 나간 자식이 가지고 있거나 팔아도 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쉽지 않다.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기반 없이 내려온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한 승계농의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내어놓으려는 지역 주민이 잘 없고, 있더라도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며 농장 근처에 집이 없는 경우도 많다. 빈집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난방비가 많이 들거나 수리할 곳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불어 빈집에 대한 인식 격차나 문화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 기본적으로 빈집 구하기가 쉽지 않음

“그게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빈집을 주려고 하는 인식이지, 그냥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오는 거는 받아주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이상한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공동체에서 막아. 꺼려해...(중략)...기본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가 어떤 신뢰나 아니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집도, 그 집 빌려주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모님 돌아가신 집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원하고 그런 거죠.”

“외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걸 부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고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외관 유지를 시켜 놓으려고, 외관 유지하려고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 빈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분들이 일단은 오실려는 분들도 있고 첫째, 둘째 이거 팔아 봐야 얼마나 된다고.”

“사실 부모님의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두 세대가 그 집에 살기에는 좀 힘든...부모님 위주로 집을 지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가를 다 해서 다시 자녀가 결혼해서 들어가기에는 살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저희도 농장 근처에 집을 알아봤는데, 정말 없어요.”

◎ 지역별 빈집 리스트 필요

“지금은 청양에서는 빈집 리스트가 있대요. 저희 때문에 저 오고 했을 때는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처음에는 발품을 팔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빈집 있으면 귀농 귀촌 팀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를 바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 빈집에 대한 인식 격차

“청년들이 살 집하고 일단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청년이 원하는 집과 (지역에 나오는 빈집이)...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청년들 보면 거의 6.25직후 집들, 그런 집들...여기서 살어, 그러는데, 뜨아한 거죠.”

“수리비가 더 나오고...”

“아직도 화장실이 밖에 있고 푸세식이고...”

◎ 문화의 차이

“청년들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쪽 그동안 봤을 때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어 해요. 청년들은 와가지고 시골생활이라고 하면 로망이죠, 그 부분이. 근데 지역사람들은 개를 집안에서 키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나중엔 함부로 집 빌려준다고 중간에 끼기가 민망하고 그렇게 한번 나섰다가 나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 임시 거처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처할 곳도 필요한데 주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곳은 귀농인의 집이다. 하지만 귀농인의 집의 경우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확보되는 수가 상당히 달라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귀농귀촌인이 쓸 수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만 규제 완화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 지역 탐색 및 정주 전 공간으로서의 임시 거처 역할

“귀농인의 집보다는 잠시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이 지역이 나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을 살펴보는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나가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찾아져야 하는데...”

“집을 신축했는데...그 안에 살 데가 없어서...이장님들한테 전화 돌리고 하다가...들어난 데가 제실당이었어요...조건이 한 달에 10만 원에 사는 대신 제사하는 날에는 다른 데에서 잠을 자야하구요. 중간 중간에 집이 없어서 한 달에 4번을 다녔어요...다른 곳은 제실방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제삿날에 음식을 해줘야 하고, 여름에 선산 2번 제초하는 거 하고, 다행히 제사지내기 전에 나와서 음식은 안 해줘도 되었고...그 생활을 1년도 넘게 했어요.”

◎ 귀농귀촌 이외의 목적으로도 귀농인의 집 활용 가능한 현실

“귀농인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농사가 목적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공사하러 왔는데 여기 6개월 공사하러 왔는데 귀농인 그거 신청해서 주소도 한 번도 ○○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입주를 했어. 왜냐면 주소를 안 옮기고 나중에 옮긴다고 할 수 있거든요.”

◎ 농막의 규제 완화

“농막에 대한 법규를 좀 완화시켜줘서 한 10평 정도, 지금은 5평에서 6평 정도인데. 한 10평 정도를 이동식으로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게 해서 잠깐 났다가 그 다음에...그 비용도 보증금, 보증금 돌려줄 때 계약 끝나고, 수리비 빼고 돌려주는 형식...지자체에서 임대할 수 있게.”

“그렇려면 또 중요한 거는 대지예요. 그래서 농막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대지를 만들 필요 없이 자기 밭이나 논에 자기 논에 철근으로 시멘트가 아니라 철근으로 잠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가 철거하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1년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떠나게 되면 반납하고, 보증금 까고, 그런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

“정화조까지 임시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 승인을 해주고, 대신에 철수할 때 정화조까지 같이 철거를 할 수 있게...농막이나 컨테이너를 놓고 정화조를 설치를 못해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까지 풀어야지.”

○ 면 단위 임대주택

결국은 빈집과 임시 거처를 지나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하며 읍 단위가 아니라 농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면 단위의 임대 주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면 단위 임대주택

“그런 임대주택이 다 읍이나 도시에 몰려 있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 집이든 5년 사업을 들어올 땐 있는데 그 다음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공공임대 주택이 면 단위에 농지와 가까운 마을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다 사실은 임대주택이 다 도시 읍이나 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의 환경에는 관심을 안 갖게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농사짓는 걸 자녀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 농촌 안에 농사 짓는 데에서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다 읍에서 왔다 갔다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단계 말고 나중에 농촌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겠다, 요기서 사람들과 살아가겠다 했을 때는 애초에 면 단위 내에서 주거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고...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2) 농업 관련 시설

농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농기계와 같은 고가의 장비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개인별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는 현재의 규모로는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 기초 자금이 많이 드는 편이라 이러한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공유하고, 같이 쓰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 다양한 장비 지원 필요

“현실적으로 장비의 어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지자체별로 틀리긴 한데, 어떤 지자체에선 트랙터, 기계 자체를 빌려주는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에선 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착형 기계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충남 쪽에는 대부분 부착형 기계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 세척 시설 필요

“아침에 9시에 빌려 가면 그날 5시까지 반납을 해야 돼요.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흙을... 그게 일하다가 세척을 하려고 하면 3시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가지고 가서 닦아서 반납을 하는데, ○○ 같은 경우는 3개의 지소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세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임대소 바로 옆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 농업 기초 자금이 많이 듭

“연습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생활 기초적인 게 신규 분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농기계부터 토지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막상 와서 땅을 샀는데 농기계도 사야 되고 집고 지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제일 먼저 투자비용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야지, 트랙터를 내가 굳이 안 사도 조금의 비용을...저도 하우스 10동 이렇게 지어도 일 년에 저도 두어번 정도 빌렸어요. 트랙터 하나에 삼천 정도 하는데 저도 멀리서 빌려서 비용 드리고 같이 쓰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시골에 아무도 인맥이 없다(고 하면), 이걸 동네 사람,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요런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트랙터를 사더라도 요 근방에 청년들 몇 킬로 이내에 몇 명이 모여서 사면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배송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트럭에서도 내리고 올리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여성 농업인 애길 해도 저도 기계를 내리다가 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한테 배송을 안전하게 농기계 임대 센터에서 해준다고 하면 트럭에 대한 구입비용도 없을 테고, 트랙터 같은 게 배송이 된다고 하면 트럭 안 사도 되고, 요것만 해도 5천만 원, 인당 지원은 못 해줘도 배송 서비스만 해줘도 인당 5~6천씩은 아껴주는 거거든요.”

(3) 문화, 복지, 교육 등

문화, 복지의 경우 많은 불편을 느끼지는 않고 있었지만 교육 부분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지역 차원에서 농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과 시설 등을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 차원에서는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가지는 이점이 있었으며 특정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등이 부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간과 관련해서는 특히 먼 단위 청년 농업인들의 공유공간이 필요하며 청년방이나 다양한 농업 및 그 외의 생활 정보의 수집과 공유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비수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정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무실 기능 외에도 가공과 유통까지 가능하게 허가를 열어주면 더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폐교나 유휴 창고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듯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체가 중요한데 관 중심으로 진행하지 말고 청년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년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내 정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청년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제 일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급식과 같은 요구도 있었으며 정주기반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

◎ 공유 문화 필요

“농업도 마찬가지지만...집이나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하게 장난감이라든지 자기가 사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나 공유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 학교 운동장 개방

“학교 운동장 개방(이 필요해요). 학교가 개방이 안 되고 운동장은 사용을 못 해요...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꼭 공무원 쪽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 아니면 여차하면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 청년 공유공간 필요

“청년 일자리 카페라고 해서 그런 카페를 지정해 놓 다음에 거기 가면 프린터도 쓸 수 있고 팩스도 쓸 수 있고 거기서 취업 준비도 하고 취업정보가 모여 있어서...일주일 단위로 홍성군에 올라오는 구인 리스트들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있고 가끔 거기서 이력서 쓰는, 면접 보는 그런 청년 정책 중에 그런 섹터가 있거든요... 군 단위나 정말 청년 농업인들도 팩스 보낼 때 필요하고 프린트 한 장이라도 알아보거나 부탁하지 않고 피씨방 가지 않고도 업무를 볼 수 있고...이런 회의가 있으면 사실 지금은 개인 집에 가서 하면 조금 부담도 되고 할 텐데, 이 정도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모임 공간.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일자리 카페 같은 거. 그런 거를 청년 농업인 버전으로 해서 그런 정보와 인프라를 좀 쓸 수 있는(게 필요해요).”

“면 단위에서 사람이 쪼개지면 크게 좋은 건물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 하나, 따뜻하게. 노인들 노인정 있듯이. 청년들도 청년 방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친환경가공장이 지역적으로 많지 않다보니깐...가공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깐 유통사업자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유통사업자를 널려고 하면...2종 근린시설이 있어야 해요. 거점과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하나를 여러 명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있는. 우리 명의로 사업자를 널려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통 관련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업자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나 가공품이 모인 공간이라면 서로 판매하는데도 시너지 효과도 꽤 있을 거구요.”

◎ 청년 인건비 지원

“공유공간이 있어서 농업하고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공간에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가 마련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보들을 모으고 수신하고 할 수 있었으면...”

◎ 자율성 확보

“그런 것들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사람의 구성이 다르니까 지역에서 역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려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프로그램 올해 써, 그러면 여기저기 똑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엔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프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제안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거점공간 만드는 거보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공간을 꾸밀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누구한테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에는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유시설이 있어 회의 등에 대여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일과시간에 맞춰져 있어 실제로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 후 늦은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정주 기반을,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유희시설에 대한 이용권,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미리 검토를 거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정책을 이용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 농가들과 교류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인식의 변화도 끌어 올 수 있을 것 같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 지역아동센터 역할 중요

“아이들이 50명 미만의 학교고 그 중에 60% 정도가 아동센터 가요. 거기에 가면 아침에 아이가 차 타고 가면 거기서 밥을 먹고 저녁밥까지 먹고 와요...다문화 가정 아이나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근데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지척에.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아이가 돌봄을 받았던 지역 내에서 계속 돌봄을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겐 좋잖아요.”

◎ 지역 차원의 돌봄 필요

“학교 차량 지원을 해서 아동센터까지 돌봄 다 하고 집에까지 갈 수 있게끔 하자. 가정 돌봄이 안 되면 지역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 어떤 생활이 마을 안에서의 교육과 같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는 있어요.”

◎ 지역 작은 학교 이점

“부모가 해주지 않는 걸 학교가 해주니까. 작은 학교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저흰 4월부터 계속 학교를 갔어요. 현장 체험도 다 갔어요. 수학여행도 다 가요. 공백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아동 센터에서도 활동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학교랑 연계돼서 한다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충분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 지역 내 정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자리 필요

“정주 환경이란 거 지역 문제잖아요. 교육이든 교통이든 환경이든...청년 농업인들 도와주는 역할...돌보미, 육아 도우미도 할 수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청년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사이드 활동으로 프로젝트 식으로 만들어내는 같이 몇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현장에서 그걸 스스로 그 지역에 맞는 걸 좀 찾아서 올리고 교육 기획해서 올리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면...물론 이제 그렇게 돈 주는데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만 지역 단위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걸 하면 좀 농업인들 역할들을 자기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도 제대로 하고...사는 사람에게도 보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좋겠다.”

◎ 일자리보다는 일거리 필요

“청년 농업인이 농외 소득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자.”

“일자리보다는 한 달 월급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해요. 농업을 해서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쓰는 건 항상 비슷하니까. 농업 외에 잠깐잠깐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사실 알바 같은 느낌이지요.”

◎ 공공급식 공간 등

“저는 농촌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밥 해먹는 거거든요. 도시락이나 공동급식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 되면 식판 들고 가서 밥 먹게. 밥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중간에 밥하러 가면 한 두시간은 그냥 가요, 여자들은. 그러다 보면 제대로 밥 못 먹죠. 농사짓는 게 힘든 게 농촌생활 자체가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밥은 하우스에서 하고 반찬만 배달을 해주는 거야. 대부분 정책이나 이야기가 나와도 청년만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4) 의료

의료 부분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노인과 영유아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 농업인을 넘어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부인과나 소아과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상시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의사진이 순환되어 배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었다.

◎ 산부인과 부족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산부인과를 아산이나 천안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에 산부인과가 없어요. 없어서 아산이나 천안까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귀농해서 아이를 갖겠냐 이거죠.”

“의료원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애가 아팠어요.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대학 병원에서 안 낳았기 때문에 안 잡아주는 거예요. 산모 때문에 그 병원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잘못된 거면 그 병원에서 잘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 병원에서 낳으면 케어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케어를 안 해요.”

◎ 긴급 의료

“시골에서 살아보니깐 제일 불편한 게 의료였어요... 제일 시급한 게 영유아, 노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힘든데.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게...”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골든타임이 보통 7분 정도라 하잖아요. 응급실은 둘째치고라도 새벽에 애가 원인 없이 아프게 되면 천안까지 가려고 하면, 아산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40분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두 번 애들 키우다 보면 다치고 아픈 경험 다 있거든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 되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차라리 119 쪽에서 그 리스트를 갖고 아예 추천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 주든지 그런 정도라도 있으면.”

◎ 의료 개선 필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의료 쪽에선 교육이나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그거는 취약한 걸 알지만, 당장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기 내려와서 애 낳고 정착하면서 애가 장성할 때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갑갑한 거죠.”

“얼마 전에 금요일 오전에 다쳤거든요. 금요일 오전에 가니까 의사가 금요일 오후에 퇴근해야 되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에 하라고. 그냥 처치만.”

◎ 보건소 활용 필요

“보건소에서 간단한 처치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보건소는 전혀 해주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밴드, 해열제를 주는 정도만 하고 전혀 간단한 주사를 놓거나 처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1차 진료만 보건소에서 제대로만 해줘도...”

(5) 기타

농한기에도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관련 일거리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으로의 이주 이후에 정착과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군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보 수집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각종 사업들이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재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청년 농업인의 기준과 경영체 등록과 같은 조건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청년층이 있어 청년 농업인의 연령 및 관련 기준¹²⁾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관련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농업이 소외되는 분야라는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도 언급되었다.

◎ 농한기 일거리 관련 지역 인프라 필요

“11월을 농한기라고 하거든요. 노지작물 하는 친구들은 봄이 올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작물이 일단 재배가 안 되니까, 시설 빼고는. 그니까 그런 친구들 귀농 귀촌한 친구들도...가정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역귀성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자체별로 환경정화사업이라던지 아니면 산불감시 등등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자체에서 운영 하는 게 대부분 지역 이장님이나 여기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한테 오고 청년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 와요.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청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만 다 가는 거죠. 그니까 청년들이 농한기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 지역 유치만이 아니라 정착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기술센터에다가 전화해서 귀농귀촌에 관심 있다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니까 유치하는 데까지는 실적이라서 관심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정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센터 관할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거까진 센터 관할이지만, 유치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잘 정착해 사는지, 어려운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 사업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이장님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 연도별로, 그 다음에 계획이 다 수립되잖아요. 몇 월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거 지원 사업이다 뭐가 있든 간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12)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도 하며, 본 연구의 사례지역이었던 의성군의 경우는 만 45세 미만으로 두고 있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도 작년에 신규 청년 농업인 지원 연령을 기존의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까지로 확대 했다.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중간에서 차단되어서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정보가 아예 사장이 되고 있고...”

◎ 청년 농업인 조건

“청년 농업인이 못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조건이 경영체 등록 3년 이하잖아요. 그 전부터 시작한 청년 농업인들이 많거든요...4~5년을 했더니 청년 농업이 갑자기 생긴 거죠. 나이가 20대인데. 나이가 20대인데 청년 농업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에서 중년 사이 애매하게 낀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3년이든 4년이든 해서 이제 조금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혜택을 받으면 여기서 자리를 잡을 거 같은데, 그런 정책은 지자체든 국가든 어디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여기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 친구들이 정말 여기서 떠나지 않고 더 정착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 지역 정착의 좋은 모델 발굴 필요

“다음 단계에 뭔가 갈 수 있는 방향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이렇게, 요 세대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모델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농업이 소외받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 초등학교 갔다 왔잖아요. 인식이 참. 저희는 농부로서 간 거잖아요. 벼베기 하러...선생님들이나 애들이나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도 심드렁하고...농부가 아니라 그냥 이벤트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래요. 진짜 농부가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업체에서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3) 소결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 결과로는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비단 기반 없이 지역에 내려온 비승계농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함께 지역에 있는 승계농의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지역 내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고 집을 마련하기까지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거주지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귀농인의 집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할텐데 빈집의 확보는 여전히 어렵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농지와 가까운 곳의

면 단위의 주거지는 지역 농업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관련한 시설과 장비도 필요했는데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농업 관련 시설과 장비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드는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문화나 교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이나 가족구성원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졌으며 농촌 지역이어서 교육과 돌봄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도 했다.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의 여건과 그들의 수요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유공간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며 읍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설치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활용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산부인과나 영유아들을 위한 소아과 등에 대한 요구와 긴급 상황에 대한 우려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의 의료 문제와도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한기에 대비하여 지역의 다양한 일거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지역의 정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청년 농업인 지원이나 돌보미, 육아 도우미,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만들어내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내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되기도 했다.

제5장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

1.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 지원 방향

1) 청년 농업인만의 문제인가?

정주 기반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거 문제나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의 문제는 청년 농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층을 넘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그리고 실제로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는 농촌 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새롭게 이주하려는 자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새롭게 이주하여 마을에 정착하려는 모두에게 빈집은 귀하고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지 못하면 얻을 수 없다. 지역에 사람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인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문화, 복지, 교육, 의료와 관련한 문제 역시 청년 농업인만이 아니라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농촌 주민이 겪고 있는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인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청년만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자녀와 손녀들의 보육 문제나 교육 문제,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부모와 본인의 노후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 단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주 기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듯 정주 기반은 농촌 지역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정주 기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귀농귀촌인을 포함하여 농촌 이주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자본적으로 열악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드시 농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촌 지역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이라면 읍내에는 주택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주택 접근이 용이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 주변에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농사지를 인력 자체가 부족한 지역 차원에서 마을 내에 인력을 확보하고 함께 지역의 농업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 단위의 청년 공유공간 마련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의 요구에 부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임시거처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귀농인의 집의 경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을 충분히 살펴보고 농지를 구하고 농사지를 기반을 준비한 이후에는 농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즉 마을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어떤 형태로든 보다 젊은 층이 마을에 내려와 지역의 농업 기반은 물론 농촌 기반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지도, 집도 비워두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경관을 해치는 등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지역에 빈집은 무수하다.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노력은 물론 면 단위와 군 단위 등 기초지자체와 도 단위의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빈집 활용 문제에 있어서 보다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휴시설을 청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의료와 관련해서도 보건지소를 활용한 순환의료진 배치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단계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까지 농업 쪽에 초점을 둔 직간접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 농업인을 지역에 유입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과정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은 단일 정책 사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프로그램으로 엮여서 진행될 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을 탐색하는 기간인 1~2년의 준비 기간에 따른 정주 기반은 임시 거처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일시적인 일거리가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에 정착하려면 이제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정주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보육과 관련한 부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초, 중학교와 관련한 부분, 방과후 교육이나 문화, 복지 기반들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정주 기반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

1)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의 비전 및 전략

(1) 비전

- 충남도의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및 농촌 과소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 충남의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추구
- 미래 인력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정착 지원

(2) 추진방향

-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에 대한 이해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 지역의 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체인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협력하고, 도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대하는 거버넌스 구축 마련 필요

(3) 추진전략

〈각종 사업 및 자금의 활용〉

- 국비 사업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각종 청년 관련 사업과 교육부 교육 관련 사업 등을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협약 등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사업,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등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 보건복지부: 지역통합돌봄사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 도시군 사업 활용: 국비 사업이 잘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도시군 차원에서 관련, 연계 사업을 만들어 도시군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 시군 자금 활용: 지역의 농업발전기금 등의 적극적인 활용
예시) 예산군 5년간 무이자 대출 5천만 원이 기능한 자금 등 활용

〈청년 농업인 역할 제고〉

-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주 기반 관련 사업들을 지역 내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시) 기본형 공익지불제의 농민들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역의 청년 및 청년 농업인의 지역 코디네이터로 활용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에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추진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청년 농업인의 공간 조성을 위한 확보 및 지원〉

-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농지라는 공간을 포함하여 거주 공간과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 조성 마련이 급선무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공유공간들이 먼 단위에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공유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운영 및 관리 등 자율성을 확보 해주어야 하며, 공유공간 활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 부가될 수 있으면 더 좋다.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기존의 청년 농업인만으로는 지역에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한 달 살아 보거나 한국형 지방부흥협력대와 같은 비교적 장기간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도입 함으로써 새로운 청년들에게는 농업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세부 사업 방안

(1) 정주 분야별 사업

○ 주거

주거와 관련해서는 비승계 청년의 경우 청년의 임시거주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귀농인의 집을 더 늘려가야 할 것이다. 지역을 선택한 후에는 승계든 비승계이든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데 청년주택사업이나 LH공공임대사업, 빈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면 단위의 주거 기반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 농업 관련 시설

농업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농업 부분에서 청년공유농장 지원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그룹에 트랙터와 부착기, 트럭까지 함께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년 대상 농기계임대사업은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적정기술 등 농업 외 시설

적정기술 등 농업 외 시설과 관련해서는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청년작업소를 다양한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문화, 교육, 복지 등 다목적 시설

문화,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해서는 청년문화교육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을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 의료

의료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가 보건소에 순환 배치되도록 하는 순환의료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간단한 보건, 의료 지원을 돕도록 하는 헬스 스카우트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의 청년을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주 지원을 위한 사업

○ 공유공간 조성 사업

공유공간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에서 도·시군비를 매칭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유공간의 세부 분야는 청년 농업인들의 주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적정기술 공간, 혹은 문화나 교육, 복지, 의료 등 지역의 여건과 지역 청년들의 수요, 그리고 지역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부가적으로 공유공간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안내와 프로그램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소 활용

- 목적: 오픈 카페형 회의실로 이용
- 지원 내용: 현재 낮에만 지도소 직원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

② 농협강당 활용

- 목적: 농민다방, 도서관 등으로 일부 리모델링, 모든 농촌주민 이용하는 공간 마련
- 지원 내용: 현재 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농촌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공

③ 청년 농업인 공간 임대 지원 사업

- 목적: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공간을 임대하고 용도는 다양
- 지원 내용: 공모사업으로 진행, 리모델링비는 도·시군 매칭 지원

④ 청년 농업인 파머스마켓을 통한 유통 지원 사업

- 목적: 상설 장터로 농산물 직거래, 다른 시군 청년 농업인 간 교류, 생산자·소비자 교류 등
- 지원 내용: 2개 군 이상 결합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

⑤ 청년공유농장 지원 사업

- 목적: 시군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 공유농장 조성(협업농장 및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등으로 활용)
- 지원 내용: 시군 단위 시범사업으로 설치(2~3개소)

⑥ 폐교 활용방안

- 목적: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유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임대해 줄 필요가 있음
- * 내부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교육 및 놀이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카페, 목공실,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화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운동장은 텃밭이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교육 오픈 공간으로 활용함. 정기적인 로컬푸드 장터나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폴리마켓을 열어 도시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
-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충남폐교자산 활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각 이외에 임대(대부)의 경우, 공공 목적의 경우에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두고 있어 현실적인 임대료로 보기는 어려움(부록 참고)
- 전제 조건:
 - * 임대비: 공공의 목적인만큼 임대비를 대폭 낮추어 제공
 - * 규제완화: 농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의 관련 실과와 협의 필요
- 지원 내용: 내외부 리모델링비 지원 필요(도시군 매칭)

○ 일거리 지원

일거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지역정주환경청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이 역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활동 혹은 일거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표 20] 충남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지원 사업 제안(안)

분야별	대상	사업명	방법	재원 및 성격	역할 제안
주거	비승계	청년의 임시거주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제도 활용	도비, 시군비(기존)	-도,시군: 보조
	전 대상	청년주택사업	용자/임대 등 지역에 맞게	국가 시군비(신규)	-국: 용자/보조 -도: 시설비 -시군: 농지확보 -지역: 지역주택협동조합
		내공공임대사업		시군비	-도: 시설비 -시군: 농지확보 -지역: 지역주택협동조합
		빈집 지원 사업	지역단위/ 시군 관리	지역단위/ 시군 관리	-지역단위로 맡길 수도 있고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농업 관련 시설	전 대상	청년교육농장 사업	지역단위/ 시군 관리/ 공동교유농장	시군비	-도시군: 도시군유지 제공
		청년농기계 임대사업	5인 이상 청년그룹에 제공/ 시군 단위 설치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적정기술 등 농업 외 시설	전 대상	청년작업소	하드웨어사업	국비(기존)/ 시군 시범사업	-국, 시군비 -지역: 청년운영위원회 구성
문화/교육 /복지	전 대상	청년문화/ 교육공간 리모델링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진행	도비, 시군비 (신규)	-도: 리모델링비지원 -시군: 시설제공 -지역: 지역위원회 구성
의료	전 대상	순환의료진사업	일주일 한번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 순환 배치	도비	-도: 보조
		헬스스카우트	보건지소 방문치료 지원 등	도비, 시군비 (신규)	-도: 보조 -시군: 보건지소 제공 -지역: 자치(위원)회 청년 참여

분야별	대상	사업명	방법	재원 및 성격	역할 제안
공유공간	전 대상	청년 농업인 공유공간 임대 사업	면 단위 설치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운영은 지역 청년에게
		오픈형 카페 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활용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운영은 지역 청년에게
		농민다방, 농민도서관	농협강당 활용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운영은 지역
		청년 농업인 파머스마켓 지원	상설장터 설치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운영은 청년 농업인
		폐교 활용 지원	도서관,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설치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운영은 청년 농업인 -교육부 허가 필요
		공유공간 청년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일거리	전 대상	지역정주환경청년 지원 사업	정주환경 관련 지원을 하는 청년에게 지급	도시군비	-도/시군: 5:5 매칭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면서 그에 대한 지역 차원의 유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지역을 선택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정주 기반은 지역 정착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외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지역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실제 지역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확보 등 정주 기반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섯 군데 관련 조직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조직 가운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지원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었고,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지역조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청년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지역에 새롭게 내려와 농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역 탐색을 위한 임시 거처와 빈집을 활용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언급되었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농업 관련 정보의 발신처로서뿐 아니라 문화나 복지 측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유희시설의 활용 등도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공간의 활용 및 운영을 청년 농업인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이 강조되었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 결과로는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비단 기반 없이 지역에 내려온 비승계농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함께 지역에 있는 승계농의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지역 내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고 집을 마련하기까지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거주지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다. 문화나 교육, 복지과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의 여건과 그들의 수요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유공간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며 읍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설치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활용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는 산부인과나 영유아들을 위한 소아과 등에 대한 요구와 긴급 상황에 대한 우려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의 의료 문제와도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은 비단 청년 농업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새롭게 지역에 내려오려는 귀농귀촌인은 물론 이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정주 기반과 관련한 개선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단위의 논의 구조 속에서 실제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정주 기반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을 마련하고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 개선과 더불어 지역에 청년층이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에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 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확실히 필요하다. 마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농촌마을의 위기 속에서 또한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청년 농업인 확보는 지역 농업의 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책 제언

◎ 중앙 정부의 역할

청년 농업인 정책 마련 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및 청년귀농장기교육사업 등 청년 농업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교육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상 청년 농업인 정책은 청창농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귀농귀촌 관련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인과 똑같은 농업 정책과 농촌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공동체 일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정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 실국 연계 노력 필요

특히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둘러싼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 이들 사업을 농촌 지역의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함께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 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2020. 3. 2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이와 같은 협력사업 연계 안에서 청년 농업인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이 각각의 부처에서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형태를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청년 농업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이 처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실에 맞게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역할에 맞도록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충남 내에서도 천안과 청양은 사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군 공용지의 활용

우선 지방 정부 전체적으로는 도, 시군 공용지에 대해서 관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신축은 물론 리모델링 등)를 검토해 나가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사례 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국유지도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비사업 및 도시군 기존 사업과의 연계

다음으로 국비사업은 물론 도, 시군 차원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천의 삶기술 학교와 같이 국가사업이 잘 이루어진 곳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인건비나 프로그램 사업비를 마련하여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농협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주 기반과 관련한 사업을 제안하고 유치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지역아동센터나 여성농업인센터, 보건지소 활용 등 공공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면 단위 청년 농업인 공유공간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기능 복합형 공유공간 및 시설의 확대가 면 단위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청년과 관련한 공유공간은 최근 카페 형태로 읍 단위에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을 마치고 활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의 장소로서의 공유공간 시설의 활용뿐만 아니라 비수기의 일거리 공유공간이나 문화 및 복지 공간으로서도 청년 농업인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모든 면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거점 면을 두고 생활권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이나 청년들에게 맡기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공유공간에서는 단순한 교류 문화 활동 이외에도 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주체적 참여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및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효과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 단위 조직 및 지역자원 조사 지원

지역 내 다양한 실천과 관련해서는 마을위원회 등의 조직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 계획 수립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조직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다양한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측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자체 내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관·전문가·중간지원조직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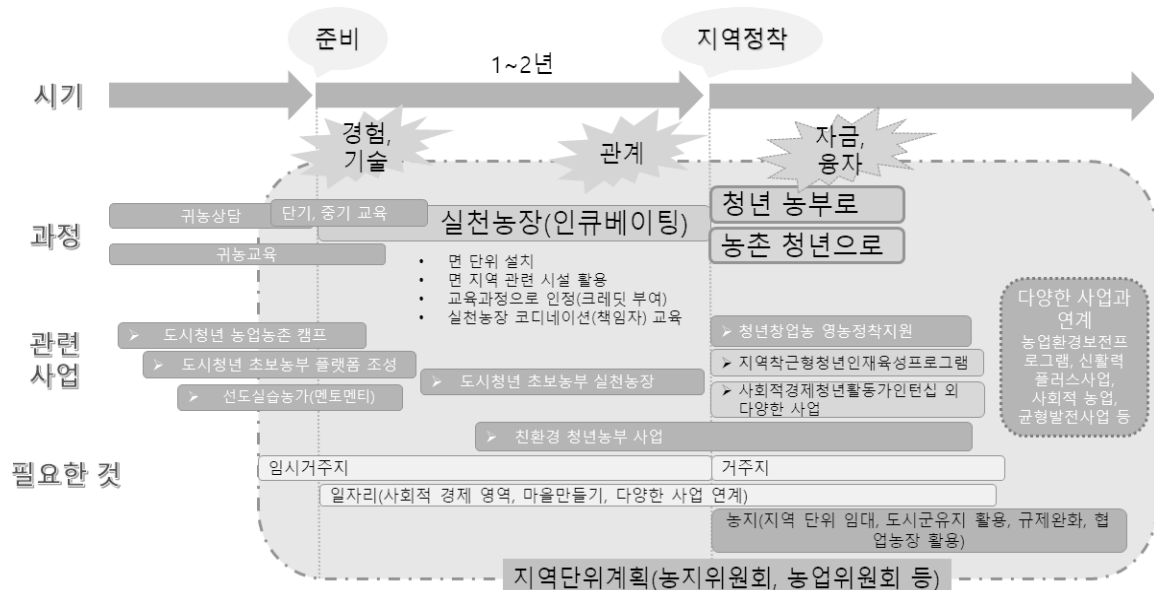
◎ 지역의 역할

지역 단위 논의 구조 마련

지역 내에서는 지역 단위 논의를 통해 실제로 지역에 어떠한 마을 구성원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지역의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구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지는 물론 농업 관련 시설과 문화나 교육, 보육, 복지, 의료 등 전반에 걸쳐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시설 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마을 인력의 역량이나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 지역 단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마을 단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마을) 단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을자치회나 마을자치위원회와의 연계나 시군 단위의 중간조직 등과도 연계해가면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자산화 사업의 적극 활용

지역 차원에서는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완주나 서천과 같이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혼자서 힘들다면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지역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다양한 마을사업으로 진행되어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활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에 폐교나 공공기관의 관련 시설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 후에 타 지역의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의 연계나 기존 농촌 사업과의 연계 등 새로운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 내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림 13]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 맵

출처: 김기흥(2019),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충남연구원

지역 내 청년 농업인 역할 제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함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 농업인에게는 청창농 사업이나 충남에서만 실시되는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과의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 이들 청년 농업인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균형발전사업, 사회적 농업 등) 가운데 새롭게 유입된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실시된 농정 전환의 큰 틀인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로 농민들의 공익기능 이행준수사항에 대한 지역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의 역할이 향후 더 커질 수 있다. 비단 농업 부문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크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가온, 김희수, 정석(2019).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6). pp. 103-118
- 김강호, 마상진(2011). 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 효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pp. 41-58
- 김기흥(2016).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전략연구 2016-42.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7).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충남리포트 Vol. 288.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8).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pp. 161-173
- 김기흥(2018). 실천농장 운영을 통한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전략연구 2018-43.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 김기승, 정민수(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pp. 103-130
- 김정섭, 김종인(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pp. 33-48
- 김정연(1999). 충남지역의 도시체계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김정연(2010). 농어촌 정주환경 변화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 김주영(2020).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발제자료
- 마상진(2011). 농촌활력화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농산업교육학회. pp. 93-110

- 마상진, 정은미, 김정인(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박시현, 김용렬, 윤병석, 남기천(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 과제(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박시현, 심재현, 윤병석(2013).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은영(2014). 농촌활력소와 잠재농업인 육성: 학교4H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임형백(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제18집 1호. pp. 207-240
- 오해섭, 김정주(2002).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청소년교육 및 지원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85-197
- 엄창옥, 노광옥, 박상우(2017).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pp. 259-283
- 우성희, 주경필(2018). 청소년의 농촌 정주(定住)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 3-36
- 유정규(2020). 의성군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주요내용과 과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특위, 릴레이토론회(경북 의성, 안계)
- 이종재, 신남수(1991). 도시민의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1: Community의식과 정주의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7(5). pp. 261-268
- 이희창, 박희봉, 정우일(2001).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
- 전익수, 김병률(2011). 농업인력 실태와 농업인력 정책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pp. 689-708
- 조봉운, 김정연(2004) 충청남도 지역구조 변화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황성호, 이희선(2019).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pp. 1-36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안)(201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촌에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 인프라 복합 주거공간 조성. 보도자료. (2019. 1.17)
-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식품부,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주거·보육·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보도자료. (2019. 4.30)
- 정부관계부처합동(2020).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채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보도자료. 2020. 3. 25
-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8

〈부록 1〉 착수 연심회 의견 반영 여부

구분	세부 내용	반영 내용
목적 및 대상	1) 주거의 문제가 많지만 주거 이외 활용공간, 사무실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변 환경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즉 정주환경에 대한 연구가 맞음. 삶의 질 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제목 검토 3) 청년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할지 재검토 필요, 농촌 지역 청년으로 확대 검토 4) 청년이라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내부 구성이 매우 다양.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미혼/기혼, 2030세대/40대 등에 따라 정책요구가 크게 다를 수 있음	1) ‘정주’인지 ‘주거’인지 고민 하였으나 ‘정주’로 반영하였으며 삶의 질과 연계하고자 함 2) ‘정주 기반 지원 방안’으로 수정하였음 3) 청년층을 모두 다루기보다 기존대로 ‘농업인’에 초점을 두고자 함 4) 내부 구성원의 여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단계별 검토를 제안함
내용적 측면	1)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활성화 연구로 판단됨 2)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을 비중있게 다룰 필요 있음 3) 연구 범위에 대한 재검토 4) 내용이 광범위. 예상 결과,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음 5) 연구자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반영하였음 2) 현장 사례 조사 및 현장 간담회 결과를 비중있게 다루었음 3) 청년 농업인의 정주 기반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음 4) 사례 조사 및 현장 간담회를 중심으로 한 결과에 중점을 두었음 5)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 연구와 차별성을 부각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결과	1) 사업제안에서 중앙 정부 및 LH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이들 사업을 연결시키고 보강하는 사업 제안이 되었으면 함. 공공 임대와 더불어 시민자산을 증가시키는 제안 등이 있었으면 함 2) 지자체의 정책 실천이 중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반영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면 함 3) 농촌활성화 정책으로 반영	1) 2) 3) 세부 사업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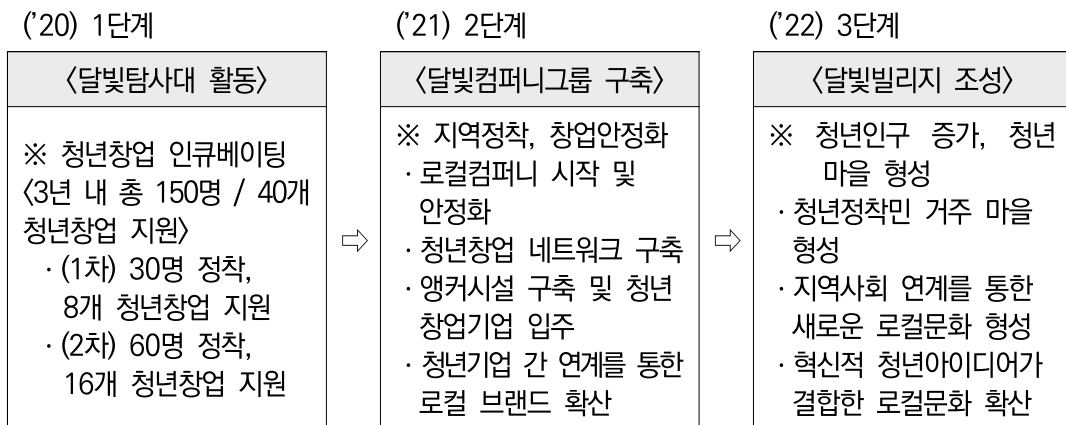
〈부록 2〉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사업

I. 청년 지역정착 신규발굴 사업(문경청년협의회 가치살자)

□ 사업개요

- 목표: 지역청년협의회가 주도, 실질적인 청년창업을 바탕으로 한 청년지역 정착의 모델 제시(※ 프로젝트명: ‘달빛탐사대’)
- 주체: (주관) 문경청년협의회 ‘가치살자’
(협업) ① 도레컴퍼니(청년창업(F&B), 로컬문화)/② 한국리노베링(도시재생)/
③ 낮선대학(로컬문화 커뮤니티)/④ 문경시(청년사업거점 및 정책 지원)
- 기간: '20. 5월 ~ 11월 <1단계 사업 기준>

※ 사업 추진 로드맵 ('20~'21)



□ 프로그램 운영 계획(1단계: 달빛탐사대 활동 기준)

- 사업 추진 개요
 - (1단계) 청년 참가자 선정
- 온/오프 심사를 통한 최종 60명 선정
 - (2단계) 창업아카데미 운영
- 참가자 대상 공통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실시
 - (3단계) 창업팀 선정 및 운영(총 16개팀)
- (유형1) LOCAL F&B(30명): 6개팀 선정(5인 1팀)
- (유형2) LOCAL CULTURE(30명): 10개팀 선정(3인 1팀)
 - (4단계) 데모데이 및 페스티벌(정착거점 및 창업자금 지원)
 - (5단계)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세부 추진 방안

①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1차) 달빛행성 이주교육	(2차) 달빛행성 탐사교육	(3차) 달빛행성 탐사진행
로컬의 이해(1개월)	창업의 이해(1개월)	창업 프로젝트(2개월) 멘토링데이/데모데이
·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 준비 과정	⇒ ·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 · 창업을 위한 팀 프로젝트
○ 커뮤니티 데이(지역네트워킹과 참가자들 간 공동체생활의 공감대 형성) ○ 로컬 데이(지역 소재 기업 방문하여 인사이트 확보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 참가자들 간 자체 네트워크		

② 데모데이 & 페스티벌

- 데모데이(심사 프로세스)
 - 다양한 모집단을 활용한 심사단 구성과 모의투자 형태의 심사를 통해 객관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방식: (1단계) 공개PT → (2단계) 오픈컨퍼런스

○ 페스티벌(밍글파티)

- 심사대원과 참가자분들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장(場)

③ 사업 지원사항 ※1단계 사업 기준('20)

○ 정착자금 지원(창업 및 정착) ※2021년 이후 지원 가능

- 지원정착지원형 일자리 임금 지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자금,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창업공간 10개소(문경전통시장), 창업공간 1개소(SOC 생활공간), 청년창업 앵커 시설 1개소

○ 생활프로그램 지원

- 주거공간 지원(남호2리 공가 10개소), 주거 임대료 50% 지원,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

II.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 사업(HBM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요(MTA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목적

- 주체적 학습역량 + 프로세스 기반의 팀 협업 역량 증진
→ 팀 학습(실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팀 동시 성장
-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자립+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지속

○ 핵심 내용

- 트레이닝 세션(Training Session)을 통한 대화 기반 커뮤니티 형성
- 러닝 모듈(Learning Module)을 통한 실행중심의 비즈니스 진행
- 러닝 저니(Learning Journey)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 MTA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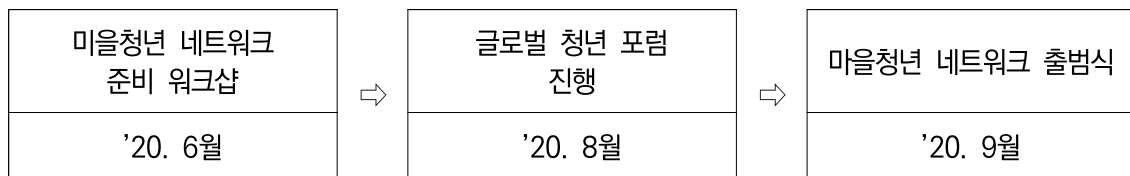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운영 계획

구분	충남 서천(삶기술학교)	전북 부안(청년센터)
기간	'20. 5~7월(12주)	'20. 9~11월(12주)
인원	20명	10명 (청년센터 운영 민간단체)
시간	주 3일*8H(2일 모듈, 1일 팀리더 미팅+비즈니스코칭)*12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마인드셋 함양 및 기초체력 강화 프로그램 · 자립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LEARNING JOURNEY · 자아발견+지역과의 상생 · 팀기업가 마인드셋 함양 · 비즈니스 기초 프로세스 + 역량 중심 콘텐츠 	

* (참고) 추가 사업대상지 1곳 협의 중

○ 국내외 마을 청년 네트워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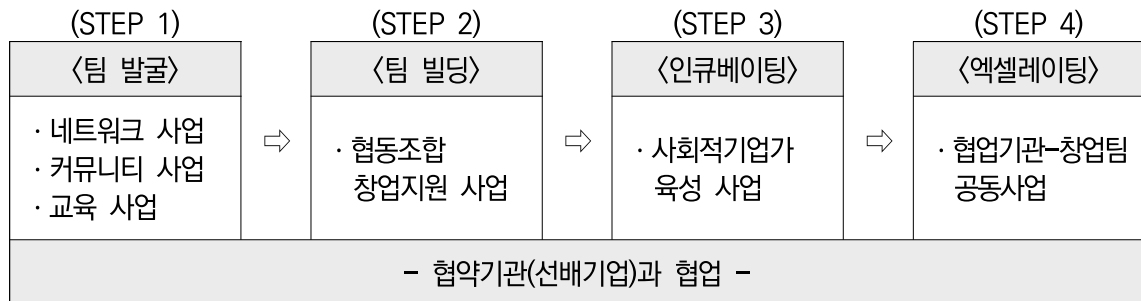


□ 글로벌 청년 팀기업 커뮤니티

○ 기본 방향

- ① 『팀창업 플랫폼*』(팀기업 커뮤니티 형성+선배 기업들과 협업),
- ② 『지역 창직 생태계』 조성(국내 5개 거점지역과 연계),
- ③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네트워크』 구축(MTA 해외 14개 LAB 연계)

* 『팀 창업 플랫폼』(파트너들과 협업)



※ 〈참고〉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 ‘연구’분야: 김윤경 (계원예대 교수)
- ‘프로그램 운영’ 분야: 이원준 (성균관대 교수)
- ‘글로벌청년 네트워크’ 분야: Jose Mari(몬드라곤대 교수),
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김일영(사회혁신연구소 소장)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 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팀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인창)을 선정해, 충남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청년마을 구축 분야에 경북 문경읍을 비롯한 11개 지역이 참여했고, 청년 역량강화사업에는 HBM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이 경합을 벌였다.

청년활력센터 조성 사업에는 모두 19개 도시가 참여해 부산시와 부안군이 최종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사업 모두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청년마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업체 ‘가치살자’팀이 운영하는 ‘달빛탐사대’ 운영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모집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의 저자인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여성 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김경하)와 한국리노베링(대표 이승민), 낮선대학(대표 백영선) 등이 참여한다.

충남 한산면에는 2019년부터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삶기술학교’가 운영 중인데 지난해 정착한 47명에 이어 올해도 40명의 청년을 새로 받아들여 지역정착을 이어간다. 오래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림회관’을 청년들의 공유사무실로 재단장하고 한산면 전체에 광대역 네트워크 5G 통신망을 설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역량강화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HBM사회적협동조합과 팀창업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산물인 소곡주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발체 및 인용,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2020. 5. 12.

〈부록 3〉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목적)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희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375억 원) 보증, 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규모)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1건당 5억 원 한도 내 금융지원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민간단체부담 2.5%, 지자체 이차보전 1%), 보증료율 0.5%(민간단체 부담)

※ 민간단체 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0. 6월 2~4주 예비대상지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진행
 - '20. 6~7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선정주체별 실행계획서 접수
 - '20. 7월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지원
 - '20. 8~12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0. 12월 성과공유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행안부는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예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20곳의 민간단체를 선정했다.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은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이하 '농협', '신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61곳의 지역자산화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5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실사가 진행됐고, 행안부, 신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자산화 운영위원회에서 예비대상지 20곳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지역주민과 상호협력 체계 구현 가능성, 소유 및 운영 구조의 공공성, 추진 주체의 역량, 상환 능력 등 재무사항이며, 예비 대상지 20곳은 다음과 같다.

지역	예비 대상지(20)
서울	마을언덕(서대문구), 마인드디자인(중구), 해빗투게더(마포구)
부산	디자인팩(진구)
대구	공터(동구)
인천	미추홀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미추홀구), 비아이이(계양구)
광주	한글피움(광산구)
대전	대덕 품앗이 협동조합(대덕구)
강원	문화프로덕션 도모(춘천시), 화천마음나래(화천군)
충북	임원경제 사회적협동조합(청주시)
충남	자이엔트(서천군)
전북	고산다움(완주군),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전주시)
전남	건맥1897(목포시), 동락점빵(영광군), 정남진아카데미(장흥군)
경남	공유를 위한 창조(거제시)
제주	푸른바이크 웨어링(제주시)

예비 대상지는 신보의 보증심사,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 건당 최대 5억 원의 융자(7월), 맞춤형 컨설팅(8~12월), 성과공유 네트워킹 참여(12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선정 이후 '22년까지 매해 신규 공모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20~'22년 총 3년간 375억 원, 75건 예정 / 1건당 5억 원 한도 내 융자지원)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발췌 및 인용, 전국 각지의 유휴공간, 지역사회혁신활동 공간으로 새단장, 2020. 6. 8.

〈부록 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발생
 - * ('18년 합계출산율) 서울 0.76, 부산 0.9, 대구 0.99 vs 세종 1.57, 전남 1.24, 제주 1.22, 충남 1.19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 청장년의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고, 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필요

□ 공모 개요

- (사업기간) '19. 4월 ~ 12월
- (총사업비) 40억 원(특교세 20억, 지방비 20억)* 특교세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총 4~5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8~10억 정도, 특교세+지방비)
 - * 심사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사업 유형) 청장년과 귀촌인들의 창업 지원, 소통·교류 공간 조성, 주거 공동시설 지원 등
- (추진 실적) 총 20개소, 297억 원(특교세 178억, 지방비 119억) 지원
 - * ('17년) 9개 시·군 대상 사업 추진 147억 원(특교세 88, 지방비 59)
 - ('18년) 11개 시·군 대상 사업 추진 150억 원(특교세 90, 지방비 60)

□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20-16 ·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연구

글쓴이 · 김기흥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0년 12월 31일 / 발행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5(경제산업연구실), 041-840-1114(대표)/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39-5-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쇄물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제작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을 응원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